

제331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7 호

국회사무처

2015년2월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10시10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BS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용구)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황인자 의원 대표발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 의원 대표발의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행정자치부 소관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1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여덟 분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달서을 출신의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출신 윤재옥 의원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을 우리 국민 1400만 명이 관람하고 모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힘들었지만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 동참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풀지 못한 숙제와 수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시대의 아픔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고 또다시 눈물 흘리며 감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감사합니다.

○**윤재옥 의원** 탁월한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총리님께서 취임함으로써 정말 박근혜 정부 성공의 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대통령님 비방 전단지가 서울 시내에 뿌려진 것,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간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재옥 의원** 금년 들어서 벌써 두 달 동안 10여 차례 대통령님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전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시작한 지가 2년이 되고 이제 3년 차에 대통령께서 정말 새로운 각오로 내각을 개편하고 일하려는 이 차체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단지뿐만 아니라 각종 입에 담지 못할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도 총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총리님 비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윤재옥 의원** 우선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는 감사원에서 복지 수급하는 국민들하고 또 지자체의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 각각 500명씩 1000명을 상대로 2013년 5월에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비슷한 사업이 많고 지원기준이 달라서 국민들이 신청하기에 어렵다는 그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횡령으로 인한 누수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답이 이 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를 할 당시에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복지 관련 법이 개별법으로 볼 때는 한 120개

정도 법률이 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누수현상도 많고요. 전달체계가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개 정도의 개별법이 한 80개 정도의 법으로 정비가 됐기 때문에 다소 좀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누수도 많고 또 전달체계의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감사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년에 걸쳐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연말에 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접한 적은 없습니다.

○**윤재옥 의원**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윤재옥 의원** 우선 PPT를 잠깐 보시면요.

감사 결과 특히 정부에서 행정적인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나 하면 자료를 관리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 복지수급자로 116만 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중에 32만 명에 대해서 639억이라는 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료 입력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장애연금 지급 등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장애인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서 1만 7000여 명에게 163억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기간 중에 6700명가량이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결과가 다른 장애인등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반영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축적되는 소득자료나 재산자료가 지자체에 즉시 전달이 안 되어서 6개월 만에 제공이 되니까 이 자료 지연으로 인해서 750억 정도의 지급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나 법령이 상당히 불비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같은 것을 소득에 반영해서 복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자소득이 통보가 되지 않고 지자체에서는 이자소득을 확인할 방법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15만 3000명에 대해서 연

간 959억이 잘못 지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대통령께서 복지 관련해서 지급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복지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석비서관회의 때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 총리실에서는 TF를 만들어 가지고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년간 323억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 병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복지 부분이 우리 전체 국가예산의 30%가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115조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방대한 예산 규모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 관리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부실 자료를 입력을 했다든가 또는 지연 처리한다든가 또는 제도적 미비점 이런 것으로 해서 중복 지급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누수 또 횡령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저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제 집행을 해 본 입장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지적도 지적입니다마는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챙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절한 절차와 시간을 좀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그래서 총리님, 저는 사실 행정적인 잘못은 아마 총리님이 TF를 만든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하더라도. 문제는 현장에서 사실 행정적인 잘못보다도 복지 수급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내도 좋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낸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이게 도덕불감증으로 해서 반사회적·반공익적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개 참

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구직 의사 없이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번연히 게재되고 있고 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이 의료관광을 와서 3개월 체류하면 의료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악용해 가지고 억대의 수술비를 10%~20%만 편법으로 내고 가는 사례도 있고 또 외국인들끼리는 의료보험증 번호를 서로 암기해 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등으로 인해서 연간 이 의료보험증, 건강보험증 부정 발급 및 사용으로 4000억 정도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과다 입원 등으로 인한 '나이롱 환자', 이 보험 피해액이 작년 상반기만 해도 3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또 장애인등급 판정 부정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전혀 몸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의사 소견서만 가지고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죄의식 없이 그렇게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또 나이롱 기초생활수급자, 나이롱 장애인 등 한마디로 사회복지 보장체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정말 국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반사회적·반공익적 범죄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초기에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와 관련해서 4대악 척결을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수준에 비견할 정도로 반사회적 또 공동체의식을 해하는 반공익적 복지 부정수급사범에 대한 심각한, 순서를 좀 정해서 4대악 척결 정도의 수준으로 복지 부정수급 4대악을 타깃을 정해서 전 정부 차원에서 좀 척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복지 관련 개별법이 120개 정도에서 80개 정도로 정비됐다고 말씀을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를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 또 누수 문제,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수급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80개 정도의 개별법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데 읍·면에 가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가 80개 정도의 개별법에 의한 집

행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특히 누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기강 해이 문제는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을 해 가면서 총체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초에 인사혁신위원회 발족을 말씀하시면서 공직사회 기강 해이 또 성과 부진 장차관의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윤재옥 의원** 그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국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서유출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통해서 국가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 기강이라는 게 공직자만의 이유는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역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때 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갖가지 국가 경영의 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직기강부터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총리에게 부여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임 건의 권한을 대통령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물러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재옥 의원** 그리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안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를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국가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에 달라진 대한민국의 안전, 이것을 국민들께 정말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

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첫 번째 사진은 말입니다,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날 오바마 대통령이 미 공군 마셜 소장의 현장지휘를 뒷전에 앉아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지요.

이 사진은 세월호 당일 날 우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2장을 대비해서 보여 드리는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현장과 전문성을 좀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안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사실 모처럼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일차적으로 집행해 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드문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 총리 취임 이후에 안전에 관한 시각을 현장의 관점에서 또 전문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그동안에 세월호 사고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정말 현장의 관점에서 고쳐지고 있는지 또 고쳐진 사항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데 대한 총리님의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나 공직자가 국민의 안전, 생명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안전에 관한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안전처를 총리 직속으로 두는 그러한 정부의 인식 전환도 있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국민의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총리가 직접 이것을 챙기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명심해 가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총리께서 임명되신 다음날인가 소방현장을 가서 가지고 소방관들의 방호복 문제를 지적을 하시고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했습니다.

○**윤재옥 의원** 지금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소방관들이 입는 소방복이 좀 불량품이 지급이 된 것 같아서 즉시 시정조치를 지시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은 소방관들이 역시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입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의 참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에서 위험한 활동을 하는 공직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엄정하게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옥 의원** 안전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경찰관, 해경 등이 매년 20여 명 순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직하고 나서 잠시 슬픔에 잠겨 있다가 사후대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안전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가장 잘 챙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분야 종사자들의 안전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안전대책을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민간조사업이라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화면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에 있는 것은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본 ‘조선명탐정’이라는 영화고 오른쪽에는 ‘셜록홈즈’라는 탐정소설입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만 민간조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라고 지시를 해서 작년 6월에 총리실에서 41개 신직업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관련 부처끼리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그래서 국민이 꼭 필요하고 또 경제적 유발효과도 있고 이미 외국의 민간조사업

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 군데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도 있는 이런, 또 대통령께서 관심도 가지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기관 간에 감독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문제로 지연이 되는 것은 총리께서 빨리 좀 진행을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화면 보시지요.

역대 총리가 취임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 갈등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또 법질서 확립을 하겠다고 TF도 만들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시위대가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총리께서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갈등과제 40번 중에, 대구 경북의 물 문제가 40번 과제로 책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취수원 이전을 빨리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께서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우선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총리실이 거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의화** 총리님 답변이 끝났으면 들어가게 해 주셔야지 그 말씀을 안 하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우원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의 안전성을 무시한 노후선박 수명 연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참사를 겪고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월성 1호기를 표결로 강행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표결 처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원식 의원 안전 문제를 아직도 과반수로 보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총리의 인식이 답답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법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원식 의원 후쿠시마 4주기를 앞두고 대한민국 원전 안전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벌써 세월호 교훈을 잊은 참으로 답답한 정권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주민수용성 요구도 갖추지 못한 불법적 표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탄핵 대상이고 어제의 의결은 효력정지 가처분의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문제를 표결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현행법 체계가 그렇다고 말씀을 올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2년 동안 고강도 규제 완화, 인위적 경기부양 등 경제활성화에 매진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를 다녀보면 국민들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IMF 때하고도 비교도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생활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우원식 의원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본질적으로는 지금 세계경제가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경제도 여러 가지 지금 저물가……

○우원식 의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역시 국민의 가처분소득 자체가 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원 말이 가처분소득이지 국민들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는 소리지요? 비정규직은 공식통계로만 608만이고 비공식통계까지 하면 1000만이 넘습니다.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도 277만 명에 달합니다. 자영업 인구도 600만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월수입 100만 원 이하입니다. 전체 월평균 수입도 149만 원입니다. 이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활성화가 됩니까?

박근혜정부에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에 대한 삶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한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들의 이른바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합시다마는 경제 자체가 지금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언론을 통해서 모 기업에서는 지금 임금동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경제가 어려운 그런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경제가 어려워서 가처분소득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저 표를 보세요.

표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96년에 62.6%에서 2012년에 59.7%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질노동생산성은 계속 올라가는데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올라가지 않아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실질임금은 아예 멈춰 섰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비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원식 의원 그러니까 다르지요. 경제가 안

좋아서 가처분소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접근하기 나름인데요, 경제가 나쁘면 일단 임금이……

○우원식 의원 경제가 나쁜지 진짜 볼까요? 문제는 이 노동소득이 줄어든 만큼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에 288조였어요. 그런데 2013년에 522조가 돼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걸 반증하는 겁니다. 기업은 부자가 되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동네 가서 쓸 돈이 없는 게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인식에 동의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한 500조가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GDP 대비 법인세가 한 40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한 단면만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원식 의원 가장 주요한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구하는 해법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입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의 권리 보호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공정거래법이라든가 하도급법 같은 것을 지금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런데 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없앤 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원식 의원 2년 지났는데 계속 검토해요? 국민들은 먹고살기 어려워져 죽겠다고 하는데, 저 것 다 공약 파기했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아직도 우선순위를 따지는 건 정

말 한심하고 답답한 수준입니다.

정말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박근혜정부에 내놓은 게 비정규직 종합대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망입니다, 엉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부안은 장그래 양산 대책입니다. 고용불안, 상시해고 위협 같은 휴먼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우리 서민들에게 아예 중금속이 가득한 미세먼지까지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은 바로 황사입니다.

총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노사정협의회가 3월까지……

○우원식 의원 내용을 설명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정부가 구체적인 안보다도 현재 2년 기간을 4년 정도로……

○우원식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우원식 의원 총리께서는 비정규직 현실을 실감나게 그런 장그래…… ‘미생’ 보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줄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장그래가 잘리던 날 비정규직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 장그래의 고통을 비정규직 2년 더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원 총리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원내대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비정규직 양산이란 측면에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마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원식 의원 비정규직법이 2006년에 통과돼서 쪽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율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2년 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접고용으로 다 바꿔 갔어요. 그나마 법 통과될 때 노무현 정부에서 사후대책을 세웠

는데 이명박 정부 때 다 없어지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 보완대책, 비정규직의 보완대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쏟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나마 있는, 2년을 했기 때문에 생겼던 정규직으로의 전환 그 효과마저 다 없애는 게 4년 연장안입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해 달라고 하는 거고 완전히 기업의 이익을 반영해서 정규직까지도 비정규직으로 쓰게 하는 장그래 양산법이라는 게 제 인식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이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장 높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우원식 의원 그런데도 유연성이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리고……

○우원식 의원 그것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국무총리 이완구 아무튼 원론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의원 아까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셔야지 뭐 총리께서 이런 저런 말을 그렇게 자꾸 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어떤 사안을 단언적으로 한 면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원식 의원 주요 측면이 있고 보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주요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년 연장안 철회하실 의사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원식 의원 원내대표 때, 후보 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우원식 의원 총리 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우원식 의원 대통령 얼굴 보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건 아니지요.

○우원식 의원 기간 연장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파견근로 확대입니다.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층과 소득기준 5400만 원 이상 전문직종에 대해서 파견을 완전히 열겠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55세 이상 고령자가 328만, 관리·전문직이 452만, 중복을 제외해도 741만 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체 노동인구 10명 중에 4명이 파견으로 열리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기존 파견업종 직종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모르지요? 16종입니다. 이게 바뀌면 몇 종으로 열리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400종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면 공무원인 교사, 언론사 기자, 논설위원, 대학교 교수 다 파견 대상입니다. 이런 직종의 근로자들도 앞으로는 해고 또는 명퇴 유도 후에 얼마든지 파견노동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동의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간접고용의 나라, 파견과 용역의 나라, 중산층과 서민을 탈가뭇기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재벌, 대기업, 가진 자들에게 얼마나 퍼줘야 속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경제적 과실을 사회 전체가 같이 공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우원식 의원 이게 격차 해소입니까? 노동시장 양극화를 위한 방안입니까? 그리고 이게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하는 소위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대책입니까? 문제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고 재벌, 대기업, 가진 자에 대한 과보호가 문제입니다. 탐욕스러운 대기업의 요구만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정부안은 정말 즉각 폐기되어야 됩니다.

총리 의견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유념만 할 게 아니고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셨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원식 의원** 정말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이 법에 대해서 강행하려고 아주 작심을 했어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 당사자들을 불러서 압박했습니다. ‘3월에 처리해 달라’ 이렇게 아주 데드라인까지 정했어요. 논의하고 있는 사람한테 3월달까지 해 달라고 압박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만큼 이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우원식 의원** 총리께서는 의원 시절이나 총리 후보 시절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부정적이었지요. 정말 총리로서 갖고 있는 양심,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총리께서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 하신 말씀이 하도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말이 많아서 총리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말도 바뀌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소신대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비정규직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소신에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우원식 의원** 소신대로 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다만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접니다.

○**우원식 의원**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용역, 특수고용, 불법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2014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200만입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면 300만이 넘습니다. 그간 새정치연합 을지로 위원회는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간접고용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아세요? 을지로위원회라고 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총리가,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그것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여야 사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터가 아니라 거리에서 생존을 외치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바람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절규를 완전히 외면해 버렸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무관심, 국민들을 삶이 아닌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보세요. 저게 뭘지 아세요? 사진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뭘지 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우원식 의원** 청소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쌀을 씻는 겁니다.

다음, 저건 뭘지 아세요?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이 없어서 화장실에다가 휴게실을 만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음, 저건 계약서입니다. 저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작업 중에 잡담·콧노래 하지 마라, 사무실 의자에 앉지 마라, 또 자르는 명분 중에 이적행위인 사람, 사상이 불온한 자, 청소노동자의 사상이 불온한 게 뭐예요? 이걸 아무 때나 자르겠다는 겁니다.

저분들을 노예로 보지 않으면 어찌 저런 대우가 가능합니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언제 자를지 모르기 때문에 저항도 못 합니다. 현대판 노예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지적에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간접고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사용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사용자를 위한 경제활성화만 이야기하니깐 저런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저들 국민 아십니까? 국민이 저렇게 현대판 노예로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것은 기업의 문제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충분히 유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라는 말입니다.

사례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공공부문입니다.
전국의 한국도로공사 산하 톨게이트 341곳에 수납원, 순찰원 등 모두 7000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수납원은 교대인력이 없어서 하루에 16시간 일하면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급하면 지하계단에서 불일을 봐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몰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감정노동을 평가하고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파업하면 계약해지 하겠다, 교통체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이것 안 줍니다. 이것은 완전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총리,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경제활성화 이야기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저 꼴 당하고 있다니까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하십시오. 톨게이트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공공부문에 11만 명이 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실태조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 실태를 토대로 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의 경우에 기존의 용역업체가 다시 입찰에 선정돼서 22명의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당했습니다. 원청인 연세대학교는 계약 전에 ‘고용승계는 꼭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그런 게 있습니다.

총리,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는 못 받았고요, 대강은……

○우원식 의원 잘 좀 파악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우원식 의원 노동부가 전국 160개 대학의 실

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침에 따라서 시중 노임단가를 주는 대학은 전국에 한 곳도 없습니다. 고용승계를 하도록 한 대학은 43%, 계약서에 각종 노동3권을 제약하는 대학은 63%에 이릅니다.

이것은 대학도 청소노동자들에 대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실태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대학뿐만 아니라 7년간 비정규직으로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방문간호사들도 무기계약 해 달라고 하다 잘렸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고개를 끄덕임)

○우원식 의원 민간부문의 ‘진짜 사장 나와라’ 이런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뒤에 실질적 고용주가 있는데 이른바 제삼자를 끼워서 하는 그런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의원 그렇지요. 원청이 나타나지 않고 삼자를 통해서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문제, 민간에 이런 게 많습니다. 교섭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저런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것 한번 보세요. 저분들 하는 이야기가 ‘회사는 저희를 직원이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그 회사에서 일합니다. 우리 요구하는 것 별것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살펴본다고 하지 마시고 좀 잘 파악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자살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고공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세워야?

인류의 정신적 스승이라는 마하트마 간디에 이어 인도의 초석을 다진 지도자인 네루가 60년 전

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가지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한 말씀 올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그러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은 대단히 일리가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우리 경제나 사회구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어느 정권 어느 정부가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치유하고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이해하시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잘 유념해서 구석구석 정책적 수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근혜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기조에 국민행복시대라고 하는 정책적 기조를 세운 것도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특히 근로자가,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식 의원 정부 여당,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이혜훈 의원의 최근 말을 빌려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의 핵심적으로 문제를 푸는 동력은 경제민주화다. 국민들 주머니에 돈 비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활성화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인류의 정신적 스승인 마하트마 간디에 이어 인도의 초석을 다진 지도자인 네루가 6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에는 의미가 없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속도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방향에서 속도는 오히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그 증거입니다.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리는 한 국제회의에서 ‘소득격차가 사회를 황무지로 만든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불평등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박근혜정부 2년간 대한민국의 삶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잘못 잡은 방향을 이제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 등 소수만 성장하고 경제에는 희망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 안정과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늘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비정규직의 삶도 성장하는 경제활성화로 가야만 경제의 선순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마무리해 주세요.

○우원식 의원 그 시작은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우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의원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지영 의원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전체 예산의 30%가 복지에 투입될 정도로 이미 복지국가의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복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류지영 의원 한 유력 언론은 사설에서 보육 하나만 잘해도 이 정부의 복지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꼬집어서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만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고요. 그리고 또 저출산이나 일·가정 양립, 여성의 사회진출력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의원 하지만 사건이 나고 나면 어떻게

파악하는지 의문이지만 정부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CCTV 의무화 또 신고포상금 인상, 보육교사 국가고시 전환 등 대부분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대책들을 쏟아 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보육제도, 특히 보육환경, 처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복합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저희는 대책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처벌의 강화라든가 CCTV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겠습니다마는 아동학대라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필요 조치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나 그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이러한 대책이 보완되어야지 완전한 대책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어린이집에만 미루고, 사고를 내는 교사 외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사들까지도 예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교사분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교사나 대체교사 확충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여건하에서 아이들에게 헌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규칙에 중대한 학대에 대해서 즉시퇴출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현재도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시설폐쇄처분제도가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언급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지금은 쓰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즉시 처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천 연수구 사례에서 나타난 정도로 앞으로 중대한 학대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하겠다는 좀 더 강화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정부가 이런 단편적인 대책 마련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언론에도 CCTV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정책이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보다 개방, 부모나 지역사회에 개방을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서, 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아울러 추진 예정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자체에도 문제는 많습시다. 일단 즉시 처분은 변론권 침해는 물론이고……

화면을 봐 주세요.

1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인정한 학대 의심 사례는 1만 건 이상인데 형사처벌은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권익위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즉시처분 도입은 오히려 보육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그대로 시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사나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경찰 등과의 충분히 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대한 아주 신중히 폐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장관님, 또 다른 화면을 봐 주세요.

현행법상 아동학대 규제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는 정부처럼 또 규제만 강화한다면 오히려 영유아의 피해만 가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인천 연수구 사례에서도 그랬습니다. 마는 일단 재원하던 아동들을, 시설이 폐쇄될 경우에 어떤 후속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원 조치나 이런 데 최대한 배려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제가 법안을 발의하니까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감사합니다.

○류지영 의원 정부가 새롭지 않은 정책을 새로운 것처럼 소개하고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단편적으로 규제만 강화하는데 국민과 현장이 이 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현장 또는 부모님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서 대화를 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다음은 CCTV 관련 문제인데요. 지난 25일 복지위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장관님, 정부도 이 안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여당, 야당 또 정부도 다 동의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대상을 특정한 CCTV 설치 의무화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논란의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혹시 이러한 CCTV 설치에 의해서 보육 교직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열람하는 데 있어서 목적 외에는 사용을 절대로 금지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유독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서 CCTV 설치와 운영에 있어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위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런 헌법상의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특수성, 아동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영유아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소지가 없도록 설치 목적이나 열람 대상자, 보관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부모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교사와 영유아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부모들의 또 다른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 아이를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CCTV를 열람할 경우에 부모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에 한해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밖의 목적 외 사용은 금지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또 60일간 보관기로 한 영상의 보안 문제라든가 열람 대상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또 개인정보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조치를 만들고 벌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CCTV 감시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 또 CCTV로 인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점을 우려해 보육원 또 유치

원, 학교 등에는 CCTV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님, CCTV 설치 의무화가 현재 여론의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틀 안에서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여지는 없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예, 그렇게 자발적인 유도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최근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아동학대사건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게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시켜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지영 의원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총리님,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류지영 의원 그런데 본 화면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답이 아니라 2년 전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교사의 말입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어린이집에만 원인을 묻고 처벌 강화만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도 손주를 돌보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의원 지금 0~2세 아이들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류지영 의원 그런 아이 5명을 1명의 교사가 매일 10시간 이상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돌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매년 재정부족을 이유로 열악한 상황을 오래 방치해 둔 결과에 정부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는 개선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복지위에서 통과된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예산 역시 합의는 되었지만 1043억 중 한 단 한 푼도 확보하지 않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아무리 어려워도 보육환경 개선 이번에는 정말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강조 말씀하신 이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0만 원 전후의 지금 처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처우로 양질의 교사가 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지영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구 총리님이 대한민국의 보육을 살린 국무총리로 평가받고 기억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국정 운영 중에 항상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감사합니다.

○류지영 의원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정보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써 특별하게 보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정보가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렌터카·리스 차량 등 대여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서 대여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리스는 별로 없지만 렌터카의 경우에는 상당수 위치추적기를 부착해서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렌터카 업체는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설치하고 빌린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화면은 위치추적기와 추적시스템을 판매하

는 업체에서 테스트 버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인데요, 화면 가운데에 붉은 점 보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의원 현재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고 화면 아래쪽에는 그 지역의 주소, 시동상태, 운행속도 등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치추적시스템이 이런 정보를 자세하고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이용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렇게 임의로 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지영 의원 차량 도난 문제 때문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것이라면 반납일자가 지난 경우에 미반납 차량에 대해서만 그 위치를 추적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의원 그럼에도 업체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아무런 동의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위치정보법 제15조제3항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의원 결국 현행법대로라면 업체는 대여받은 사람에게 차량 위치추적기가 달려 있다고 알려 주기만 하면 의무는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통 알려 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의원 결국 이러한 부실한 법령 속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최근에 그에 관한 민원도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할 때 고지를 해야 되고 또 그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각 렌터카 업체들이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이에 본 의원은 제15조제3항의 고지의무를 동의로 개정해서 대여받은 자가 위치 정보 제공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렌터카 업체는 지금 현재 959개 정도이고 이들이 운용하는 차량은 약 46만 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방통위는 몇 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는지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타시는 차량은 리스 차량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리스 차량입니다.

○류지영 의원 리스 차량에도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대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리스 차량을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차량 위치정보가 지금도 노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 국토위뿐만 아니라 리스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까지 포함해서 명확히 업무분담을 하시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고 관련 부처들 사이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는 렌터카는 있지만 리스 차량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없는 것은 아니고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관련 대책들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류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나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합니다. 급속한 IT 발달, 급변하는 사회, 끊임없는 복지논쟁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땀질식 정책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건전한 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사회의 논의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회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못 했지만 부모가 서로 따뜻하게 소통하고 상식과 건전한 룰이 있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저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류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수정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니 참 좋네요.

○**김태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성남 수정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태년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이 일주일쯤 지났는데요, 설 민심은 잘 들으셨지요?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다, 듣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려, 걱정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등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사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책 운영에 있어서의 무능, 그리고 국민을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또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모두 맞는 말씀인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멍이 들었다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대통령과 정부가 진실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속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여 놓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도 그럴 것 같다 이런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했던 약속, 이것 공약 아닙니까? 지금 이 공약들 중에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공약을 한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권,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역대 대통령께서 다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공약을 또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과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다소 순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의원** 공약을 100%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능력이 모자라면 능력이 모자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대정부질문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총리께서 말이지요, 글썄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취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총리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증세를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태년 의원** 증세를 안 했습니까, 정부가, 현 정부가?

○**국무총리 이완구** 증세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

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목을……

○**김태년 의원** 뭐 세목 세울, 다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세율화한다든가 그런 전통적 의미의 증세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담뱃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썽, 그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증세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년 의원** 바로 그 점이 문제인데요. 총리께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의도를 가지고 증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국민들을 좀 바보로 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증세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자기 지갑에서 세금으로 돈이 더 나갔는데 어떻게 증세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정부도 쉬운 길이 있음을 압니다. 다만 증세 문제는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기조하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 주시면 정부가 그것을 존중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증세를 해 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짓말 이게 문제라니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증세를 증세라 부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무슨 홍길동 증세입니까, 이게? 답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담뱃값 인상 문제는 여야 합의하에 인상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년 의원**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다른 것과 연관되어서 야당에서 합의를 해 준 거지 야당에서 흔쾌하게 동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건강 때문에 담뱃세 인상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실제로 국민건강에 투입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500원 남짓이잖아요. 2000원 올려 갖고 500원 남짓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국민건강 때문에 담뱃세를 인상했다 그러면 2000원 전액을 국민건강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앞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집권당 여당에서도 이거 허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국민 모두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없는 증세입니다, 복지 없는 증세. 교육·보육·복지 공약 이거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지를 축소해 볼까, 구조조

정을 할까 지금 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아니, 구조조정을 할 게 따로 있지 복지를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공인된 사실이지만 OECD 국가 중에 우리 복지 수준이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거 만천하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더 구조조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 헌법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거 헌법정신에도 위배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겁니다. 두 번 고통을 주는 겁니다. 증세 안 하겠다고 해 놓고도 서민과 월급쟁이들의 지갑만 터는 증세 이거 했고요 복지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서 축소하겠다 이러니까 국민은 더 이중으로 고통받고 더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요. 국민은 봉이 아닙니다.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태년 의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정부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신뢰에 의문이 생깁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못된 보고로 그렇게 인식하신다고 하면 총리께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직언이지요. 총리도 지금 똑같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식 속에서.

인사청문회 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입버릇처럼 ‘간단치 않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는데 이거 많은 부분에서 허위였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자기관리 철저히 했다’ 이 위세도 상당 부분 많은 경우 허세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한 것 아닙니까?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항간에, 또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래서 ‘뺑 총리’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셨고 국민들께 몇 번이나 사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시절에 대한 깊은 성찰도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이거 벌써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좀 진실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온 민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진실되지 않은 거짓말 뺑, 이제는 이거 끝내야 되고요 국민의 막힌 가슴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뚫어 뺑 이 역

할을 총리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문제는 제가 지금은 말씀을 올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4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적어도 불·탈법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총리라고 하는 이 막중한 자리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불·탈법을 훨씬 더 지난 국민의 정서라는 측면에서 봐 줘야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가 인식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성찰과 함께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가 지났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그와 관련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년 의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정부에 신뢰를 가지고 의지할 수 있으려면 총리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 이것을 지금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유념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참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지적이 있고…… 지역편중, 이른바 친박 독식, 수첩인사, 부실검증, 그래서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인사를 못하고 계세요. 물론 오늘 오후에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큰일 났구나 싶어요. 수첩이다 났나, 아니면 소통보다는 통제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전임 실장과 똑같은 사람을 못 찾은 것 아닌가, 온갖 억측이 다 나오고 있어요.

정부 수립 이래 비서실장이 공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총리께서는 기억나십니까? 비서실장이 공석이었던 때가 있었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딱 한 번 있었더라고요, 83년 아웅산 사태 때 비서실장이 희생돼서 그때 딱 한 번. 그만큼 중요한 자리지요.

그런데 비서실장 교체 이야기가 나온 지가 40

일이 넘었고, 김기춘 실장이 출입증까지 반납한 지가 5일이 넘었는데 오늘에서야 임명을 한다는 건데, 이것 인사불능 사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면 향간의 이야기처럼 문고리 3인방의 권력이 이 비서실장 역할까지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다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 장고한 이유가 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친박 친위정치·원로정치에 의존하려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감찰권으로 국민통제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 대기업만 대변하는 국정 운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정말 국민과 소통하면서 겸허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신호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태년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총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 의원님들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을 보면 도대체 대통령이 돼서 이들이 멀다 하고 이렇게 비판과 비난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좀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선출직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비서관을 쓰고 보좌관을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비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예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청문회 과정을 이 사람들은 거처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 비서라든가 비서실장의 자리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이고…… 나름대로 그 직책이 갖는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측면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김태년 의원** 그 답변이 더 걱정스러워요. 방금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좀 더 국민과 소통하면서 조금 더 겸허한 정치……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말씀의 취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

○**김태년 의원** ‘이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대통령 고유권한이니까

욕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적어도 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지 매일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그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김태년 의원**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앞으로 대통령님께 이런 옳은 직언을 좀 드려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공약 파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최악의 정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과 신뢰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를 않아요.

총리께서는 여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보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라는 제목의 새누리당의 대선 때 정책공약집,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뭐가 지켜졌고 뭐가 안 지켜졌는지.

첫 장 발간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뢰의 정치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 이행에 대해서 촉구하면 ‘경제가 어렵다’, ‘재정형편이 어렵다’, 앵무새 같은 아주 똑같은 답변만 흘러간 레코드판처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문위 간사인데요, 이 교육 분야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켜졌다는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율학기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지금 정권 3년 차인데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 단 한 푼

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폐기한 겁니까, 아니면 미루어진 겁니까? 상임위에서도 묻고 대정부질문에서도 묻고 예결위에서도 묻고, 책임 있는 답변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공약 문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제가 지난 2013년도 보궐선거에서 19대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선거공약을 일체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재선 때 수많은 공약을 내걸었는데 제가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선 때는 선거홍보물에 공약을 아예 안 넣었습니다. 외국의 어떤 정치인은 ‘공약을 아예 잊어 버려라’ 하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공약은 필요합니다.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당선됐을 때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여건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정치인이 공약을 안 지키고 싶은 정치인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대통령 공약이 최대한도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도 총리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교 무상교육 문제도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내에 이것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2017년까지 완성하겠다’ 이게 공약인데 지키겠다는 말씀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 중에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발간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건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때, 이 선거 때 이후의 경제여건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했다, 즉 무능했다 이걸 지금 자인하는 거 아니에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또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무료 운영, 작년엔 1~2학년, 올해 3~4학년, 내년도엔 5~6학년 이렇게 해서 완성

하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올해 후퇴했어요. 그래서 일선 현장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실망감이 아주 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교문위 간사로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검토해서 의원님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것 다 지방교육청에다가 지금 전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가 나름대로 공약을 지켜보려고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다 요청을 했어요. 핵심공약, 고교 무상교육 한 2400억, 초등 돌봄 한 6600억, 누리과정 2조 1500억, 이것 다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한 푼도 편성을 해 주지 않았어요. 0원을 편성했어요. 정부가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 것 모두 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도로 지방교육재정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상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방에 사업을 주려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의원 지방에다 책임 떠맡길 것을 왜 대통령이 공약합니까? 그러니까 광은 대통령이 팔고 책임은, 그 고통은 지방정부가 다 져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다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학생 수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액수가 절대적으로는 늘어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조정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되……

○김태년 의원 지금 총리의 인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학생 수가 줄면 학급 수가 줄니까, 선생님 숫자가 줄니까, 교육재정 수요가 줄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내국세 규모가 늘어나니까요. 다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김태년 의원 지금 정부의 능력이 얼마나 형편 없느냐 하면 2011년도에 누리과정 사업 만들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매해 3조씩 늘어나서 올해 49조쯤 될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39조 5000억입니다. 10조가 모자라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3년 연속 세수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나, 지방세나 국세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조 정도가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점을 감안해서 지방교육재정에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지금 세수 결손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지금 정부의 능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세입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첫 번째가 경제성장률이지요. 두 번째가 물가이지요. 이 영향을 받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매해 3% 정도 남짓 성장은 했어요, 물가는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왜 세수 결손이 발생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물가는 한 1.2% 정도 되고요. 경제성장률은 3.3에서……

○김태년 의원 그러니까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3년 동안 세수가 결손입니다. 작년도 1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계가 되는데, 따라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 자체가 적자재정을 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부문별로 그러한 문제가 지금 노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년 의원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의 철학과 능력 이게 지금 다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수 결손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MB 정부 때부터 시작된 무리한 부자 감세 정책 이게 원인의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 예측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세율 인하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부자 감세하면 경제 살아난다’, 이렇게 미신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마구 밀어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1%p 정도 줄었어

요.

총리, 1%p 정도 줄었을 때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썽요. 그것은 추계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김태년 의원 13조~14조쯤 영향을 미치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태년 의원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가졌던 최소한 그 정도의 조세정책만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정위기 이것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심각한 것은 경제성장률 예측의 오류입니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하나가 경제 여건 아닙니까? 경제성장률 아닙니까? 경제성장률 예측을 잘못하면 재정 운용에 차질을 빚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크게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거의 분식회계 수준이에요. 매해 이래요. 매해 경제성장률을 뺄뺄 시켜 놓으니까 세입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경제성장률을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IMF라든가 한국은행 추계라든가 또는 민간 전문 경제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현재 지금 3.3%에서 3.7%까지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년 의원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 물론 책임은 정부가 집니다만……

○김태년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연속이고 국회예정처에 따르면 올해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년 연속…… 해방 이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니까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전문 경제단체에서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공약과 관련해서 짚어 볼 게 대단히 많습시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기왕에 총리로 임명되었으니까, 취임하셨으니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그 소임을 책

임감 있게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대정부질의 때 보니까 다음 총선 불출마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공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그 의지가 꼭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총리 이완구 불출마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저도 지역구를 둔 정치인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적절한 기회에 제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당한 기회에 제 단호한 입장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감사합니다.

○김태년 의원 정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남 양산 출신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30년 미래의 기틀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먹고살기도 힘들었던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명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차 대전 후 인류가 이룬 성과 중 가장 큰 성과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시스템만 제대로 정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뭔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우리의 한강의 기적은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뒷에 걸리고 벽에 부딪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2~3%의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도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늘에 검은 먹구름만 보이는 것 같지만 구름 위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살리고 키워 가야 합니다.

국제적인 기관들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두뇌 지능지수가 높고 대학 진학률과 교육열도 가장 높습니다. 우리의 인적자원은 매우 우수합니다.

현대는 창조경제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체제가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국민의 자율성과 창조적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지방분권체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엔도 2013년 창조경제보고서에서 창조경제가 지역 단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992년 지방의회를 부활시켰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해 국민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진작하고 지방정부 간의 창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 발전 그리고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도 지방자치와 자율적 행정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 재정권 및 조직권 강화, 지방 공기업 등 지방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 방지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께서는 민선 충남도지사와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시면서 폭넓은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경륜에서 보실 때 지방자치제도 시행 20년을 경과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이제 20년이 말씀대로 넘었습니다. 초기보다는 많이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 운영적 측면에서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지방재정의 취약한 점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의 위임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약한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위임의 한계를 다시 명확히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 의원** 본 의원도 아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자주적인 또 자립적인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고 심지어는 무늬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비판에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주민밀착과 또 지역특성을 고려한 그런 행정 등 이러한 기반은 조성은 되었지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의 그러한 배분의 불평등성 그리고 재정분권이 없이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재정적인 취약이 심하고 상당히 지방의 중앙의존도가 점점 심화되는 그러한 역기능을 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역사적으로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통제와 종속관계를 빨리 우리가 청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을 융합해서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방자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급증 등 이러한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법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 재정권 강화에 관하여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향후 10년간 중앙에서 지방으로 연평균 7조 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10년 전인 2005년 56.2%이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 44.8%로 계속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31.7%에 불과합니다. 경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양산시의 경우에도 2013년 38.7%에 불과합니다. 군 단위는 1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8개 기초단체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왜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쓰는 것은 4 대 6 비율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취약한 점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지수요 같은 것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복지수요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 예산에 매칭펀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자치행정, 지방자치가 확대됨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사업을 벌이는 그런 탓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윤영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와 지방의 지출은 지금 현재 53 대 47입니다.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 대 20입니다. 이런 만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금 국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50 대 50의 그러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지방 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데 대해서 총리님의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우리나라 세제개편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향후 국회에서 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경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는 이게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근자에 도입된 그러한 제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내내 이 문제도 국세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우리나라 전체 세제개편 문제를 한번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영석 의원** 예, 맞습니다. 전면적인 그러한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체계를 검토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구체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현재 국세인 주세 또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하게 되면 지방의 특성에 맞는 그런 주류가 많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주를 복원함으로써 전통주와 매개를 해서 음식, 관광 또 지역의 축제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그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이러한 과세 대상의 대부분이 토지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개별 소비세 중에서 지역성이 강한,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경마장이나 또 경륜장이나 또 카지노 이런 입장세에 대해서는 그 과세 대상이 상당히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방특별소비세로 도입을 해서 지

역의 세원으로 확충하는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계개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관련 부처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법인세를 공동과세 형태로 해서 도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양산시 경우에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세수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방법인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지방이 이러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지역의 그런 세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그 외에도 본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가 필요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기능 이양에 비례해서 이러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급증하는 사회복지비 재정 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 총액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사실상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복지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칭펀드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칭펀드에 대한 비율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현재의 그 비율이 그대로 타당한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석 의원 예, 말씀하신 국고보조 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그러한 지방행정의 어떤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중복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제에 큰 틀에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중앙과 지방 또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폭넓은 경륜을 갖고 또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큼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자체적인 기구 설치권과 또 정원 관리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직과 인력 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 조직 편성권을 주면 단체장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이러한 조직과 정원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급변하는 이런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및 정원을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총액인건비제도나 또 기준인건비제도를 도입해서 지자체의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나 기준인건비제도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재량 폭을 약간 확대했을 뿐이고 상위 조직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통령령에 규정하여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또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버리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런 자치 조직권과 정원권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없는 그런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지방재정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자치조직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자치조직권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조례에 일임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은 저희들이 유지를 하면서 가능한 한 지자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자치영역은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윤영석 의원 장관께서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지방재정이나 또한 조직권·인사권 이런 측면에서 현재 그러한 통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인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윤영석 의원 다음으로 일부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라든지 재정부담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각종 재정사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재정 악화는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제도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지금 불러일

으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자치역량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진작을 할 필요가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러한 것을 조치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통제장치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윤영석 의원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등의 방만한 경영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의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현재 지방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혁신단을 저희 부에서 이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지방공기업 전체에 대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방공기업이 정상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지방 공기업으로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 들어가도록, 정상화시키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다음으로 경찰조직의 경찰관 배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전국 경찰서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보면 대도시나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여건이 비슷한 중소도시의 경우에도 도시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한 30만 정도의 중소도시도 도시에 따라서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88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남지역에서 지금 가장 높은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 지역의 치안센터나 과출소에 가면 경찰관들이 큰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30만 명 내외인 경주의 경우에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577명이고 또 군산은 540명, 여수는 581명, 부산 기장은 497명으로 양산시보다 한 30%가 적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담당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러한 근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경찰, 그런 근무지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은 주민의 치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찰관 배치에 있어서 인구비례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경찰 인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경찰 인력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이미 정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역에 따라서 경찰 인력이 편차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도 지역별에 따라서 경찰 편차가 심한 부분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편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경찰 인력을 배치를 할 때 저희들의 기준이 단순히 주민의 인구수만은 아니고 그 치안 수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발생률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건수라든지 또 관할 면적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인구수만 가지고는 사실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에 대한 필요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지역에 따라서의 그 편차는 가능한 한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배전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내세웠기에 기존 정부와는 다른 국정 철학과 소통 감수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청소년의 삶도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인구 절벽을 앞두고도 보육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은 허구였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리님, 인천 아동학대 사건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사실은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은 약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영유아 돌봄기관 학대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직무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등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런 상황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사라질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아동학대 문제는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법이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전체적인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 또 시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의원 우리 총리님께서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안 나왔습니다. 핵심은 안 나왔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육

교사의 월급이 133만 원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평균임금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제일 낮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그리고 비정규직 비율도 65%입니다. 제일 처우가 안 좋지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까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이런 것이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연결 통계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지적의 말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의원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감합니다.

○남인순 의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시간 주차하는데 6000원이 든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아이 돌보는데 비용으로 계산하면 1000원이 든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보육교사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 11시간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지금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면,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은 호봉이 없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도 지자체장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의원 총리님, 근로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게 돼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근로기준법상과 또 현실적인 근무체계가 다르니까요, 보통 한 12시간 정도……

○남인순 의원 근로기준법상?

○국무총리 이완구 8시간……

○남인순 의원 근로기준법상으로는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그런데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마땅히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인순 의원 현실을 모르시잖아요? 지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 예외 직종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동법 시행령에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직군은 1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우리 총리님, 바로 이번에 아동학대 문제가 2월 달에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문제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약속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호봉제 도입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제가 여기서 약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관계부처장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제가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통계가 오락가락합니다마는 보통 한 1.17, 1.2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예,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2013년에 1.19명으로 나왔는데요.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게 있어요. 2014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粗)출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동안의 추정치에서 가장 최저라는 것입니다. 8.6명, 인구 1000명당 8.6명이 태어났는데요. 이게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최저치라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66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완화되지 않는 것, 더 떨어지는 것은 결국은 저출산대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4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3.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표어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들었던 표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에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 올린 대로 1.17,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돼 버리고 말았습시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이라든가 또는 출산·육아·교육, 일과 직장의 양립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단순히 비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5년 단위별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해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의원** 올해 아마 2차 저출산 종합계획이, 새로마지플랜이 올해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총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정부가 고민하는 방향은 뭔가 삼천포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정부가 최근 저; 출산대책으로 ‘만혼 추세 완화’를 얘기했습니다. 만혼, 결혼이 늦어지는 것, 이것을 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총리께서는 이것이 저출산을 막는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 저도 개인적으로 제 자식이 지금 서른다섯 됐는데 장가를 안 갑니다.

매일같이 장가를 가라고 그렇게 채근을 하는데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참 이게 간단치가 않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만혼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교육 문제 또 집, 주택 보유 문제 또 결혼비용 문제 또 직장 문제, 이게 단편적으로 해법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의원** 지금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라서 스웨덴의 경우에는 결혼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은 1.9명이고요, 호주의 경우에는 결혼율이 낮지만 합계출산율이 또 1.9명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의 연관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나 하면 프랑스에서 1999년도에 공동생활약정인 PACS법, 일명 동거법인데요. 일명 동거법을 제정해서 동거커플의 아이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7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그다음 해에 1.87명으로 그렇게 경총 뛰었습니다. 이런 외국의 사례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는 결혼 기반, 가족주의기반의 복지지원정책에서 벗어날 때 저출산의 문제가 좀 해결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십수 년 동안에 육십몇 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해법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가면 인구 감소 추세로 갈 개연성이 높아지고요. 내년 정도 가면 노동생산인구 자체가 줄어들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범정부적 대책을 빨리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제가 총리님을 조금 이따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고용노동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남인순 의원** 장관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요즘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아버지의 육아참여 TV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한번 봤습니다.

○**남인순 의원** 보신 적 있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남인순 의원**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체 육아휴직 중에 한 5% 정도 남성이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5%는 많이 보셨네요. 5%가 아니고 3.3%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아빠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남인순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여성의 힘으로 우리 정치와 대한민국을 한번 제대로 바꿔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임기 3년 차인 2007년에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시행했는데 고용노동부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들었습니다.

○**남인순 의원** 들으셨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남인순 의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메르켈 총리가 한 얘기인데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모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남인순 의원** 사실 제일 핵심은 뭐였냐면 부모휴가 소득대체율을 67%로 높였더니 남성들의 휴가 사용률이 2006년에 3.3%였었는데 2010년, 4년 지난 후에 20%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3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1.43명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결국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서 정책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독일의 교훈이고 포인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고 아까 얘기를 하

셔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남인순 의원** 메르켈 독일 총리가 보수 정당 출신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남인순 의원** 그런데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주 과감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박근혜정부에서도 작년 10월에 '아빠의 달'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낮지만 증가율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증가 비율이 5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작년 10월에 아빠의 달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할 분위기는 많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엄마든 아빠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아직도 사내에서 동료들이랄지 또 고용주의 눈치를 보는 부분이 많아서 눈치 보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저희들은 소중하다고 봐서 금년에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인순 의원** 박근혜정부가 사실은 아빠의 달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아빠의 달은 공약과는 다르게 100%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최고 구간 150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그쳐서 그 공약도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아휴직 소득……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 부분은 100%인데 상한선을 두는 게 중소기업 전체의 임금구조를 봤을 때 옳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 원으로 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 부분은 중소기업에 정부가 보완을 해 줘야지요.

사실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독일의 교훈입니다. 지금은 40%로 돼 있는데 앞으로 70%까지 확대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결국은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을 하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은 소중하다고 봐서, 그래서 육아휴직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할

경우는 통상임금 40%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여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를 300만 원 받는 분이 4시간 일하고 4시간 육아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급여를 60% 보조는 하기 때문에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육아휴직 외에 근로자들이 필요하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또는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 1년 해서 엄마도 3년 쓸 수 있고 아빠도 3년 쓸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에 관련된 제도는 나름의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이 부분들이 기업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말 그대로 눈치법을 기업 내에 없애고, 또 하나는 금년부터는 임신을 하게 되면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서 50만 원 지원하는 고운맘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확인하고 당사자와 회사에 대해서 가급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법에 보장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총리님이 나와 주십시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이 2.1명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예컨대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해서 2060년에 연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산율이 2.1명으로 증가하면 기금 소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그러면 지금 연기금 고갈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핵심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연기금의 사회적 투자를 저출산과 고령화 사업으로 유도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아이디어상으로는 대단

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현재와 같은 출산율로 가면 정말로 국가적 재앙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생각이라고……

○남인순 의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생활고를 비판해서 동반 자살한 송파세 모녀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5만 140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가 생활형편과 동떨어진 보험료를 낸 까닭은 현행 부과체계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총리, 종합소득 500만 원 아래라는 이유로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나라 있습니까, OECD 나라 중에?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런 엉터리 부과체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 엉터리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고 언제까지 개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 건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과 직장의 형평성 문제 또 소득계층의 형평성 문제를 기본전제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좀 더 로데이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2011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좀 정밀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3월 말까지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남인순 의원 3월 말까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국회에 보고하도록……

○남인순 의원 국회에 보고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마는 제가……

○**남인순 의원** 알겠습니다. 3월 말까지 노력하셔서……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디테일한 걸 지금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해 온 임시특별조치를 지난해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검토 결과는 어떠한가요? 아직 보고 못 받으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남인순 의원**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검토하는 이유가 수입규제 강도가 높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일본이 혹시 WTO에 제소할 경우에 패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사능 관련 정보, 이거를 저는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어제 일본 NHK가 보도한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웠는데요. 여기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미리 자료가 안 갔을 거예요.

총리님!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화면 한번……

○**국무총리 이완구** 여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정황을 작년 4월부터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은폐를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1원전 2호기 오염수를 측정할 결과 방사성 세슘이 리터당 2만 3000베크렐이 포함되었고 이 오염수가 배수로를 통해서 후쿠시마 항구로 또 바깥 바다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전 방사능 관리가 부실해서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어종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입규제를, 저희가 수입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희들 판단의 준거는 또 기준은 정확하게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우리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더 강력한 수입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준표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거기도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검토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저자세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걱정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인순 의원** 바로 보고를 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다음은 담뱃값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저가담배를 검토해 보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꼼수 서민 증세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총리께서는 혹시 예전의 솔 담배, 청자 담배, 은하수 같은 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이 저가담배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원래 담뱃값 인상할 때 저희 여야가 합의해서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적 목표는 국민의 건강 문제를 우려해서 인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다 고가다라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국민들한테 재정적 부담을 드렸다는 측면에 대해

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의원** 저가담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의원** 사실 저가담배라고 하는 거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격정책에 반하는 반금연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인순 의원**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오죽했으면 어르신들이 20만 원도 안 되는 기초연금 대부분을 담뱃세로 뺏어 가는 불효정권이라고 이런 말씀 하세요. 설 민심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 가 있는 사병들의 경우에도 흡연율이 42.9%에 달하는데 한 달분 급여 전체를 담뱃값으로 지불해도 모자라서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듣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래서 이렇게 담뱃값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가담배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단시간 내에 과도하게 인상이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던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20만 원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여러 가지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분들만이 아니고요. 소득 상위 30% 노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줬다 뺏고 있는 거 알

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남인순 의원**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만 명에 이릅니까?

그래서 이런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나라에서 이렇게 가장 최빈곤층의 노인한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 이거 바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의 그 지적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약 48% 정도로 OECD 평균 13%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보완 대책이 있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소득의 범위에서요 기초연금을 빼면 됩니다. 바로 시행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집권 3년 차를 맞는 박근혜정부가 국민 절망의 시대가 아닌 국민행복의 시대를 원한다면, 그리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임을 인정받으려면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의 길을 내고 복지의 다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남윤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병 출신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팔달구·서둔동·탑동 출신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입니다.

수원에는 모두 22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팔달구에 소재한 영동시장은 한복과 침구류 등이 유명합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을 자주 찾아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국회 등원 후 첫 대정부 질문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복을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공은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수차례 부러움을 표시한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그중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교육당국의 잘못된 입시정책을 비롯한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사회 혼란과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높은 교육열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잘못된 입시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도 더욱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중에 떠도는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남 의원 이게 학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기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엄마의 정보력입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들어 본 일이 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용남 의원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입니다만 왜 엄마의 정보력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요건으로 꼽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무엇에 어려움을 느꼈는지를 설문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봐 주시면 46%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다양한 대입전형 요소로 인해서, 방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 대학교의 대학입시 전형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시중에서는 3000개다, 5000개다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각 대학이 표방하는 어떤 명칭이라고 그럴까, 다양화를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표현에서 나오는 문제가 많고 우리 교육당국으로서는 대개 여섯 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아직도 자기 실력과 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여러 가지 적절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남 의원 지금 여섯 가지라고 답변하신 것은 수능 네 가지, 정시 두 가지를 크게 묶어서 여섯 가지고요.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전형 수 이게 2013학년도 기준으로 3200여 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명칭이 다를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또 평가방법, 그것의 반영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한 3200여 가지, 셀 수 없이, 지금 정확한 숫자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전형 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수백만 원씩 비용을 들여 가면서 사설 입시 컨설팅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게 대학입시 설명회를 가득 메운 학부모들과 학생들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도에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신 바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의원 하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부의 대학 전형 간소화가 실제로 간소화되었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간소화되었다고 느낀 것은 22.5%에 불과하고요, 간소화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34.3%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부의 간소화 정책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했다’는 의견은 13.9%인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절반에 가까운 49.7%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입시 간소화가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년제 198개 대학교의 전형 명도 제각각이라서, 예를 들자면 네오르네상스 전형, 국민프런티어 전형…… 이름만 들어 갖고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대학에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전형 방법, 그러니까 전형 요소와 반영 비율도 각 대학별로, 과별로 천차만

별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 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성평가 도입 여부 문제도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래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은 사실 컨설팅 업체를 찾아다녀야 하고 더구나 변별력이 없는 소위 물수능으로 인해서 공부 열심히 또 잘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교에 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소위 운에 따라 좌우되는 로또 대입이다 이런 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각 대학과 학과에서 요구하는 비교과 성적, 소위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교육비를 아이들의 좋은 스펙을 맞춰 주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가 그대로 입시 결과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2015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합격자 자료를 보니깐요, 서울대 합격자 3304명 중에 서울 25개 자치구 출신의 고등학생이 1306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이 소위 잘산다는 강남구였는데 239명이 합격했습니다. 이에 비교되는 구로 금천구는 불과 6명에 불과했고요, 강북구도 10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금천구를 비교하면 40 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경제력의 차이가 그대로 입시 결과에 반영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내의 격차도 이렇게 큰데 서울과 지방과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고도 좋은 계층 이동의 경로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경로가 점점 잘못된 입시정책과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이제 점점 듣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돼서 대한민국이 미래에도 계속 희망의 땅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에서는 복잡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학입시제도

를 대폭 손질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질이 우수한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 또는 운에 의해서 입시 결과가 좌우되지 않고 노력이 결코 배신당하지 않는 그런 입시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존경하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시중에서 이른바 국민의 목소리로, 또 학생들의 고통스러운 외마디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오늘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2013년 말을 계기로 해서 14년 작년하고 올해 새로운 입시제도를 채택해서 간명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를 하도록 어떻게 한 걸음이라도 나가 보자 하고 노력하는 중이고,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 더 보완할 것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층 간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을 위한 대입 전형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을 넣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통계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사회적 편차나 또 경제적 편차에 따르는 그야말로 사다리 역할을 훼손하는 요소가 없는가도 다시 한 번 무겁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봐 주시면, 총리께서는 지난 2012년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오원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또 작년 연말에 벌어졌던 박춘봉 살인사건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기억합니다.

○김용남 의원 이 두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수원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용남 의원 수원 팔달구에서 둘 다 일어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고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도 내고 각종 의무도 부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원의 치안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울산광역시 그리고 창원시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인구는 수원시가 오히려 가장 많습니다. 또 총 범죄, 5대 범죄 발생 건수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안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는 4개의 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5개의 경찰서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수원은 단지 3개의 경찰서가 수원 4개 구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상황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강력사건과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팔달구에는 정작 경찰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 구에 위치한 경찰서가 팔달구를 가운데 두고 삼등분을 해서 나눠서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팔달구의 치안 공백이 매우 염려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다른 구에 비해서 총 범죄 발생 건수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또 경기도 내의 1급 서 평균보다도 많습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 주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에 치안 수요가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주거 형태에서도 팔달구는 어느 구보다도 치안 수요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팔달구의 열악한 치안 인프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면, 이렇게 팔달구를 가운데 두고 3개의 구에 소재한 경찰서가 팔달구를 찢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에 팔달경찰서를 신설함으로써 팔달구의 치안뿐만 아니라 다른 구, 수원시 전체 치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는 수원 시민들이 밤잠을 설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팔달경찰서의 신설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우선 수원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의

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총리로 있는 한 의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는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께서 천도를 결심하고 지은 성곽으로 애초에는 수원 화성을 상업도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합리한 규제에 인해서 수원 화성 중심으로 한 도심이 점점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수원 화성을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거기가 허허벌판입니까, 아니면 도시지역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시내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김용남 의원 그렇습니다. 수원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르면 수원 화성은 성곽 외곽 201m부터 500m까지의 사이 구역은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제정한 수원 화성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르면 이 조례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문화재청의 기준에 따르면 500m 이내 구역에 대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14m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 정도밖에 짓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빨간색이 성곽을 표시했고요. 건물 높이가 최고 14m로 규제되고 있는 보라색 구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도심지역이 점점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화면을 봐 주시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에도 매우 어긋납니다. 수원시는 말씀드린 대로 500m 이내 구역이 제한받고 있지만 승례문 지역은 100m 이내 또 같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남한산성도 300m 이내를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맞추어

서 합리성과 균형성을 갖춘 문화재 보호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례하고 다른 일부 허용기준은 반드시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허용기준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수원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500m를 다 적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이 문화재 유형이라든지 또 주변 입지, 환경, 특성을 고려해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서, 이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또 심의를 하면서 한 70%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남 의원** 장관님,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은 정말 허허벌판에 있고요 수원 화성은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불도저 운전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 공교육 제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희망의 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용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덕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전주 덕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사례가 우리 헌정사에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성주 의원** 오늘 비서실장 임명 사실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성주 의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그 문제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주 의원** 자, 그러면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완구** 글쎄, 그 문제는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글쎄, 그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의원** 뭘 생각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쎄요, 국정원장이 갖는 의미 또 그 자리의 어떤 여러 가지 중요성, 또 대통령비서실장이 갖는 의미 또 자리의 중요성, 기타 역할, 기능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최근 부쩍 강조해 오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김성주 의원** 어떻습니까? 정보기관의 수장을 마치 친위부대 호위부대인 양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앉혀서 국민과 무슨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총리는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대통령의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또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야당과의 소통 또 언론과의 소통,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제가 지금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총리님도 좀 충격받으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뭐 저는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니다.

○**김성주 의원**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니다. 저도 여기 들어와서 방금 알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국

정원장이 정치적 중립하에 국가안보의 중요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대통령비서실장은 나름대로의 비서실장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주 의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나오셨나요?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들어오시도록 하시지요.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출석할 때까지 제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잠시 총리님,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총리님한테 질문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법무부장관한테 질문할까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말씀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아니요, 어제 황교안 장관이 답변했던 것에 대해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본인한테 직접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장관님한테 다른 걸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좀 봐줄 줄 알았는데 너무 혹독하게 하셔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잘하라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김성주 의원** 저희도 기대가 많았고 환영을 했는데 그 기대가 실망이 되고 정말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 그러나 저도, 지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왜 드릴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총리라고 하는 이 직책이 갖는 그 무게감 때문에 모든 것을 저의 불찰과 저의 성찰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성주 의원** 먼저 지역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언제 개청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게 혁신도시가 지금 전국에 여러 개 건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조만간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주하고 전주에……

○**김성주 의원** 사전 질문지를 넣었는데 총리실이 총리 임명이 얼마 안 돼서 아직 준비가 안 되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게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요,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래요.

올해 5월 달 이전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성주 의원** 그러면 혹시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는 언제 이전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내년 8월 완공 예정입니다. 아니, 총리가 뭐 알고 계셔야지 제가 질문을 할 텐데 다 모른다고 하시니 이게 참 난감합니다.

요새 그런데 전북에서는 정말 기금본부가 이전하는지, 전부 오는지, 말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법으로 정한 기금본부 이전에 대한 소모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단과 본부가 성공적으로 전북 이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관심 실천해주시기를 총리님께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가도록 돼 있는 것은 가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는 세종시와 더불어서 국토의 종합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살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작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오셔서 전북을 탄소중심 창조경제 생태계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지요.

○**김성주 의원** 탄소중심 창조경제 생태계로 조성하겠다, 이것 역시 사전에 질문지를 썼는데 모른다고 하니……

○**국무총리 이완구** 이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대요, 답변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런데 아직 탄소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미래성장동력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또 아울러서 체계적 R&D 지원을 위해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여쭙려고 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 나중에 답변해……

○국무총리 이완구 대통령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하신 사안이기도 하지만 지금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되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지금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표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 내에 총괄조정기구를 담당하는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도 묻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지원단 설치 여부를 떠나서 지금 새만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광활한 새만금으로 조성된 부지를 저희가 그렇게 유희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중 FTA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대책뿐만이 아니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 새만금으로 인한 부지를 뭐 지역은 물론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조정실 내에 그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예.

그러면 잠시 들어가시고, 황교안 장관님 출석 하셨나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김성주 의원 검찰청법에 검사 파견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사가 검사로 있는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정치적인, 그런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없애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장관은 답변에서 좀 다르게 답변 하셨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답변하셨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를 사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청와대 파견을 사직하고, 파견이 끝나고 나면 다시 검찰의 최고 요직으로 재임용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나요? 이것 괜찮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파견된 검사들 중에 나중에 다시 검찰로 돌아오겠다고 검사임용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적격을 갖추고 있는가 면밀하게 심사해서 그에 상당한 판단을 한 뒤에 적임자라고 판단하면 검사로 재임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게 바로 꿈수 파견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꿈수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쓰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97년도 법이 생긴 이후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우려를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조심하면서 검사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어제 장관은 답변에서 청와대 파견 금지는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답하셨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런데 저희가 당시 자료를 봤더니요, 대선 당시인 12월 2일 날 검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이게 서로 간에 다른 얘기인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다른 얘기입니다.

검사를 법무부에 파견하지 않고, 검사를 법무부에 파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무부의 탈……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문민화라고 하는 얘기로 하기도 합니다마는 검찰과 법무부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도 있다 이런 지적이고, 거기서 말하는 다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들 파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장관님, 조금 전에 ‘꼼수’가 정치권의 용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여야 300명 국회의원 서로 간에 이 얘기 하면서 상대방에게 꼼수 안 부립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장관의 답변이야말로 그야말로 꼼수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는 법에 정해진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가급적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장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서 어디 가고 싶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하여튼 국민들에게 기여가 되고 또 주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김성주 의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왜 안 되셨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적절한 답이, 아마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답을 하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저도 질문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 양극화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사회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쪽방촌, 생계비관 자살, 청년 삼포세대, 폐지 줍는 노인의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낮은 복지 지출로 인한 사회안전망 미비로 시작된 결혼 지연과 출산 기피로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를 낳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복지·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총리,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한

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소득이 늘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전체적인 경제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인별로 볼 때는 사실상 실질구매력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제가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중에 가계가 차지하는 몫이 적습니다. 미국이 74%, 일본이 64%인 데 비해서 우리는 한참 뒤지는 55%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경제성장이 되고 수출이 늘고 기업 이익이 증가해도 가계소득은 제자리입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벌의 금고는 가득 차지만 국민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이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불평등이라든가 사회 양극화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의원** 그뿐이 아닙니다. 임금소득의 양극화도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는 5배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은 한 세 배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는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임금 불평등이 최고 수준입니다. 저임금 비중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4명 중 1명이 저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한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지, 총리님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개인 자산의 포션이 대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80%가.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소위 경제가 침체가 됐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난다면 지금 말씀 올린 가계부채 문제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의원** 결국은 집을 구입하는 데 대부분

의 빚을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단언적으로 그렇게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중 개인적으로 가계부채의 대부분의 포션이 부동산 구입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우리나라 부채의 대부분이 바로 주택 매입 부채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의원 그런데 그 부채를 줄이는 대신에 현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통통 붙어 터진 국수’, 부동산 3법인데 이게 과연 맞는 처방인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어느 정부가 국민한테 빚내서 집 사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경제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김성주 의원 LTV·DTI 내려 주는 게 그게 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낮을 때 그러한 문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총리는 미국을 좋아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썬요, 저는 미국에서 한 7년 있었습니다마는 좋아한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글썬요, 흑인으로서 유일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하는 ‘텐텐(10.10)’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김성주 의원 텐텐.

○국무총리 이완구 텐텐이요?

○김성주 의원 예.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시간당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자고 하는 주장입니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신년연두교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시는 의회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1년에 1만 50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트라이 잇!(해 보세요!)’라고 연설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멋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그 말씀 자체는 대단히 멋있게 들리네요.

○김성주 의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통통 붙은 국수 얘기하면서 야당을 원망합니다. 두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야당을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의원 그러면 여당을 지칭한 거예요?

○국무총리 이완구 여당도 아니고요, 모두 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경제난국을 좀 해결하자는 그런 충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고 말씀하신다면 감격의 기립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아마 모든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총리님, 대통령님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현재 시간당 5580원에 있는 이 최저임금제 문제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또 오바마 대통령은 상위 1%에 대한 증세를 강조합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 사랑제에 오셔서 여야 영수회담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 상위 1%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걷자, 이렇게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현재 제가 알기로 재작년입니다, 최고세율 소득 구간이 3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좀 내려졌지요. 그래서 최고세율인 38%

를 지금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법인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최고세율이 현재 우리 1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세입 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40조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 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 문제를 손을 댔을 경우에 행여 경제가 혹시 위축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신중한 접근과 고려, 끝날 때까지 계속하시다가 아무것도 안 하실까 겁이 납니다.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황우여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고복지 국가입니까, 저복지 국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고복지 국가라고 아직 얘기할 수가 없지요.

○**김성주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제 복지체계를 갖추고 복지국가로 진입 중이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같은 부총리인 최경환 부총리께서는 이미 고복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황우여 부총리는 견해가 좀 다르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는 아무래도 사회 쪽에 시각을 맞추다 보니까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김성주 의원** 그게 정답이지요. 맞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율은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은 28%, 의료는 61%, 가족은 35%, 실업은 35%에 불과합니다. 고복지가 아니라 저복지,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결핍이 바로 심각한 노후 빈곤과 저출산을 낳은 원인입니다.

부총리, 우리는 복지 과잉입니까, 복지 결핍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저희들이 지금 어

려움을 느끼는 것은 복지 과잉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 비추어서 지난 10년 동안 OECD 두세 배의 복지 증가비용 이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또 복지예산과 다른 예산 간의 균형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아직 있고 또 이 부분을 극복하려면 경제가 강력히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 성장동력이나 재정 확충에, 국민들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 점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아직 제대로 잘 펼쳐지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 의원**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복지 지출이 너무 많다고 불멘소리하고 김무성 대표께서는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게을러질 만큼 복지나 누려 봤으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요.

최근에 문제인 대표는 ‘복지 후퇴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복지 과잉, 복지 결핍, 두 대표의 말 중에서 누가 더 맞습니까?

새누리당 대표를 지내셨던 황우여 부총리께서 한번 솔직히 평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지금 국민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우리 박근혜정부가 국민 앞에 공약한 복지 분야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그늘지고 어려운 사각지대 또는 복지 단계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야말로 경착륙 비슷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그리고 정부가 일심이 되어서 내년 경제의 전망치를 밝게 하고 또 특히 올해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 회복의 물꼬를 터서 그동안에 복지에 대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국민 앞에 유감 표시를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약속 이행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남짓 버는

국민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140만 명, 이번 기초법 통과로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보는데도 320만 명이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소모적인 복지 논쟁으로 귀중한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내년이 총선인데 새누리당 지금 복지 시비 걸다가 어차피 또 복지공약 들고 나올 것 아닙니까? 나는 정부가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와 여당의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로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대한 논쟁이나 또 이것이 과잉이나, 아니냐 이러한 논쟁보다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의 경제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앞으로 경제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예측하면서 국민과 함께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솔직한 심정으로 의논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또 재정 또한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지만 이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각오입니다.

○김성주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한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공약가계부, 지금은 완전히 구멍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심각한 세수 결손입니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정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대신 거위의 깃털을 살짝 뽑기로 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박근혜정부는 법인세보다 소득세를 10조 6000억 더 걷었습니다. 법인세는 3조 원 덜 걷었지만 근로소득세는 5000억을 더 걷었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한 MB 정부 때도 소득세보다 법인세 비중이 높았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박근혜정부 2년 만에 벌어

진 건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질문 요지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표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김성주 의원 표를 좀 띄워 주세요.

이것 말고 소득세·법인세 연도별 현황자료 그래프요.

보십시오. 2012년 이후로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합니다. 즉 개인이 내는 세금이 법인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자코털 안 건드리고 거위의 깃털을 뽑아 버린 것이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 좁은 소견으로는 법인세의 증가 속도가 소득세에 비해서 좀 떨어졌거나 또는 정체되어 있는 것은 경기가 3년째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돼 가지고 법인세 징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 총리님, MB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있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지표상으로는 현재 3년 동안 지금 세수 결함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주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건어야 될 세금을 박근혜정부가 안 걷고 그것을 서민과 월급쟁이들 쥐어짜서 마련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러나 의원님,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 건어야 될 세금을 안 걷겠습니까? 정권을 잡을 때는 공약을 내걸고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정권을 잡은 건데 그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법인세 징수가 제가 알기로 한 40조 원 정도 됩니다. 또 소득세가 제가 알기로 한 54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밑에 있는 것은 현재 경제 상태를 웅변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활성화를 해서 내수시장을 확충해 가지고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세수 증대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주 의원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러한 불공정과 불공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

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KBS가 실시한 여론 조사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세금부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이유가 고소득층이 세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총리님, 다시 답변해 보세요. 왜 국민들은 총리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아니, 저는 국민들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소득세에 대해서 최고 구간 최고세율을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가지고 38%에 달하는 고세율을 지금 적용해서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국민들은 증세 얘기하기 전에 조세정의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같은 고복지 국가도 그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부자의 자선이 아니라 잘사는 사람이 주로 부담하는 조세정책에 따라 유지한다고 스웨덴 정부가 발행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증세 논란이 아니라 조세정의 이야기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때라고 하는 생각인데, 총리님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이완구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세정의가 살아 있어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성주 의원 용기를 가지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갑윤 김성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의원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입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화돼서 젊은 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고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맞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지요.

우선 총리로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좀 많이 다니시면서 각 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듣는 총리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리님,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수도권 규제 문제는 국토의 종합개발이라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또 지방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함께 조화롭게 정책적 수단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수도권에 있는 2500만 명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나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의 원주민들은 몇 % 안 됩니다. 다 보면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에서 오신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한 30년간 수도권 규제 많이 하면서 규제 지금.....

일본에 있는 동경 같은 데도 수도권 규제했다가 다 풀었습니다. 선진국이 다 그런 절차를, 우를 범하면서 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고 시행령을 다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일본이나 불란서나 영국 같은 나라도 한때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다가 요즘은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지금 어렵습니다. 기업도 어렵고요. 지금 기업이 수도권 규제나 또 1만 4000개 되는 규제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각 부처 장관님들과 협의를 잘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규제 완화하는 데 또 규제 속에서 시행령을 완화하면서도 얼마든지 행위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이

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신흥국가로 지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뭘로 만들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은 못 찍고 대학 졸업식장을 안 가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이나 우리 아들딸들 고통받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이우현 의원** 기업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일부 기업인들이 죄를 저서 잘못돼서 교도소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기업인들, 중소기업인들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분들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못 시켜 준 잘못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총수가 교도소에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이제 사면 복권해서 우리 일자리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총리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 원칙 속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문제도 또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법무장관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현 의원** 법과 원칙 중요하고요, 신뢰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또 역대 정권도 다 기업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법과 원칙, 신뢰만을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건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지하에서 잠들고 있는 또 장롱에서 잠자는 또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부가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전자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든 지금 제조업이나 관광 서비스업이나 이런 분야에 재투자할 안 하

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개발을 했는데 지금 정부 지원에는 한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지하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재력가들이 옛날에 흑시라도 그런 세금을 덜 냈거나 또 어떻게 해서 부정돈을 벌었다거나 이래서 지하경제에 잠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외국으로 돈을 안 가지고 나가고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해 줘야 된다, 그리고 과감한 지원책도 한번 총리께서 새로 임명되었으니까…… 지금 어려운 국민들은 경제활성화에, 아마 팔구십 %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완구** 불확실한 천당보다는 확실한 지옥을 선호하는 게 기업의 생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윤이 확실하다면 왜 기업이 투자와 경제활동을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경제 흐름에 따라서 이 문제가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하경제 활성화 문제는 논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규모의 한 이삼십 %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그것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총리님, 체육 좋아하시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제가 다리가 아파서, 이번에 청문회 때도 그것 때문에 한참 혼났습니다마는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체육은 좋아하지만 활동은 못 합니다.

○**이우현 의원** 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금년도에는 꼭 골을 넣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요.

저는 체육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우리나라가 병역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가지고 얘기하면 축구로 졸업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1600명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받는 학생은 상무하고 경찰청 팀하고 해서 한 30명 됩

니다.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가 병역을 기피하게 되고 또 2년 동안 군에 가서 쉬면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딱 차서 30대가 넘어서 군대를 가니까 막냇동생도 안 되는 사람한테 야단맞고 이런 싫은 소리 들으니까 병역사고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도요 60년대 70년대에도 육해공군 해병대에 다 체육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같이 근무하는 시절도 아니고 군대 병영생활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 과감하게 부대에 체육특기자, 예체능특기자를 확대해서 체육특기자나 예체능에 있는 학생들이나 병역의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에 가서 같이 운동하고 또 자기 부대 간의 체육대회에서 사기도 양성시켜 주고 예능 하는 친구들은 부대에 가서 공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군에서 문제가 있는 또 군대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 군인들이 육군 같은 경우 아마 8%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육해공군 해병대 다 이제 체육부를 많이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같이 해서, 감독 월급을 거기에서 주게 해도 군인들 월급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시켜야지 오히려…… 체육, K-pop, 예능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졌고요. 그런데 지금 다 기피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부가 스스로 우리 젊은이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들어가는 문은 너무 좁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리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체육인 출신인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경력의 단절이라고 하는 문제와 함께 국민의 정서 또 형평 이런 문제와의 여러 가지 조화로운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동의는 하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현 의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배구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군에 가서 주말에 병영하는 우리 군인들이 같이 운동하고 체육을 통해서 인성 또 모든 배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능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군대

생활 하면서 이렇게 공연……

아니, 외박 한번 나와서 한 명이 실수해서 그것을 없애고, 다 없애면 앞으로…… 한 사람이 실수했으면 법에 맞춰서 그 한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거지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관광에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이 저는 관광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동의합니다.

○**이우현 의원** 그런데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숙박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숙박이 거의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요금 또 숙박시설도 아주 부족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 몇십 년 전에는 호텔을 지으면 오락실을 조그맣게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행성이 되다 보니까 전부 취소를 해서 지금은 외국 관광객이나 관광객들이 밤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0실 이상의 호텔을 짓는 분들한테는 자그마한 오락실이라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한 칠 팔백 실 무궁화 한 6개 정도 되는 큰 호텔은 카지노도 좀 내줘서……

지금 불법도박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리님?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에 쓰는 그 금액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한도를 정해 주면 되잖아요, 한 30만 원, 20만 이상 못 하게끔. 그래서 그것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면 되고요.

그래야지 관광 숙박에 투자를 하지 지금 건물 지어 가지고 인건비 비싸고요, 투자비 많이 들어가고, 관광기금 해 봐야 은행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해 가지고 경매가로 따지니까 관광기금 자체가 받기도 힘들고, 관광객들은 매년 삼사십 %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에 백제문화의 거점인 부여와 공주 지역에 해마다 일본 관광객들이 5만~10만 명 정도가 오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

로 호텔 하나 없기 때문에 그저 지나가는 관광으로 해서 전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유치해서 현재 지금 부여에 가 보시면 서울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호텔을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이 오락실 문제라든가 카지노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특히 국민적 합의 내지는 국민적 정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우현 의원 일본에 가면 다 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 이완구 기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민적 동의와 합의 속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산업을 증대시킨다든가 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총리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좀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이우현 의원 저는 8년간 지방의회에서 봤는데 지방의 공직자들, 특히 인허가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거의 일을 안 합니다. 기업이 뭔가 허가를 신청하면 거의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각도가 다른 겁니다.

중국에 있는 시장이나 당서기나 이런 사람들은 유치를 하러 벌써 20년 전부터 전 세계를 뛰어다녔거든요. 지금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인허가에 있는 공직자들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 줘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이 감사에 문제점이 많다. 지금 감사제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감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감사원 있고요, 국무총리실 있고요, 각 부처에 있고요, 각 광역시 있고 지방자치 있고 검찰·경찰 똑같은 것 가지고, 요즘은 고발을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똑같은 걸 가지고 각각 고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감사제도를 이제 각 감사기관이 병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한번 해 봤는데 그래서 하나를 감사원에서 했으면 그것을 인터넷에 띄워 놓으면 이 분야를 또 투서하면 여기서 이미 했구나…… 공무원들 한번 조사받으러 가면 며칠간 잠 못 자고, 한번 가면 또 몇 시간

씩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 인허가 안 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힘들다,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감사제도를, 이제는 옛날과 같은 공직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감사제도를 병행하고, 공무원연금 때문에 지금 우리 공직자들 사기 많이 저하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총리님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과감한 개혁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들어가시지요.

사회교육 황우여 부총리님!

부총리님, 지금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대학 평가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이우현 의원 그런데 혹시 예체능대학은, 예를 들어서 체육대학이나 또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 체육을 통해서 국가에 엄청난 헌신을 하는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문계 대학과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체능 때문에, 우리나라의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서 많은 희생을 한 대학들을 이제는 좀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교육부장관으로서 동감이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역별로 유사한 대학군은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것으로요, 예를 들면 여자대학도 또 문제예요. 여자대학을 남녀공학 하는 대학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여자대학으로서의 건학이념이나 특성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자대학끼리 하도록 또 세계의 여자대학과 경쟁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체능 부분도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같은 취지에서 예체능끼리 거기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불이익이 안 가게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더욱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이 의원님 말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문체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심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대부분 심판 처우와 관련된 게 재원 문제라서 사실은 문체부 자체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그러니까 심판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불신하잖아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 같은 데는 1년 예산이 1200억에서 1300억 되는데 심판 하나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어요. 이런 것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심판들이 할 때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올바른 법과 원칙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정부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심판들한테 정규직은 못 해 출망정 비정규직은 해 줘야지요. 대한축구협회 임원들 연봉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거 반만 갖다 줘도 심판들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이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심판수당이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축구 분야는 그렇지만 나머지 분야, 다른 여타 분야들은 굉장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현 의원** 국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지금 보면서……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비인기 종목에는 정부가 더 지원해 주고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과감하게 세워 달라 이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현 의원** 들어가세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정부와 국회 여야가 함께 노력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과의 약속을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 진나라가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한 원동력은 바로 상앙의 법가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가사상에 관한 고사성어로 ‘이목지신’이 있습니다. 상앙이 길이 약 9m인 나무를 남문에 세워놓은 다음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긴 사람에게는 10금을 주겠다고 방을 붙였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금에서 50금으로 증액하였더니 옮기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상앙은 즉시 약속대로 50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 백성들이 진나라의 정책을 믿고 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목지신은 나라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 준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 검찰 인사에서 대구 출신의 권정훈 부장검사를 사표 수리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평검사 2명을 사표 수리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각 임명하였습니다. 더욱이 2013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에 임명했던 이창수 검사를 검찰의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과에 신규 임용했습니다. 청와대 파견 검사를 법무부 검찰국에 회전문 인사함으로써 일선 검찰에 배치하던 관행조차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검찰을 청와대 부속기관으로 전략시켜 버린 그야말로 청와대의 노골적인 검찰 장악 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불안해서 청와대를 검사들로 채우는 것입니까? 검찰의 대부 격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비선실세 의혹 이후 30%대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기에 검찰 권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정치 검사 몇 명으로 권력을 보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고대 상앙의 이목지신은커녕 현대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조기 레임덕이 두렵다면 대선 때 박 대통령의 이미지였던 원칙과 신뢰로 돌아가는 게 정도일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조차 사설 제목에서 ‘검사의 청와대 꿈수 파견, 공약 파기 사과해야 한다’ 또 ‘편법 인사한 청와대·검찰, 법치와 민주 말할 자격 있나?’ ‘청와대는 현직 검사 차출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최대한 법대로 하고 검찰이 공정한 기관으로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들이 있는 점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기호 의원** 법대로 하셨는데 왜 보수 언론에서조차 ‘공약 파기’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동안 여러 번 여론이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동안의 걱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 때문에 우려의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단순히 우려의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방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편법 인사한 청와대·검찰, 법치와 민주 말할 자격이 없다’, ‘공약 파기 사과해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려를 제기한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2013년 처음에 청와대 파견 인사를 할 때 그때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청와대 파견 인사를 하고 또 청와대에 파견되었던 인사를 아예 법무부로, 법무부 검찰과로 복귀시키는 이런 것을 보면서 보수 언론에서조차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자꾸 우려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을 넘어선 겁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해서 입법화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9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최대한 자제하면서 검사의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또 데려다가 쓰기도 하고 임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우려들이 아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사 과정에서 그 점을 유념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호 의원** 장관께서 그저께 정호준 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가지고 지금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직업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특정 직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어떤 공직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담임권이라든지 또 평등의 원칙의 문제라든지 그런 헌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국민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무나는 아니지만 자격이 있고 역량이 있으면, 국가관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임용될 수 있는 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호 의원**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 15조에 말하는 기본권은요 국민이 누구나 선택,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곳이나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가고자 하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고, 그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직업선택의 자유 한 가지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고 평등권의 문제, 또 공무담임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헌법적으로 꼭 이것이 헌법불합치 법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기호 의원** 공무담임권 말씀하시는데요, 공무담임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무원시험을 쳐 가지고 합격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바로 공무담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일반직 공무원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다르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강제로 임명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지 갈 수 있는 곳이지 제가 ‘청와대 비서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갈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강제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를 감안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장관님, 굉장히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협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비서실에 가는 사람한테 협의해서 갑니까?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게 하려고 임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께서 협의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임명하기 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서기호 의원** 확인하는 것이지 그것이 협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꾸 협의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이고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서기호 의원** 좀 쉽게 이야기합시다.

대통령비서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이고 협의할 수 있는 곳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비서실은 일반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하고도 관계가 없고 평등의 원칙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하고도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 교과서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장관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이다 이 말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유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언론에서 장관님, 직업선택의 자유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궤변이다라고 보수 언론에서조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보수 언론의 걱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같이 감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세 가지의 법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헌법

교과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서기호 의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국민 누구나, 검사 누구나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직업선택의 자유 영역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가려고 할 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또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 여건이 되었을 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직담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기호 의원** 지금 장관께서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서기호 의원**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되고 있고 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당하게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옹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기호 의원** 지금 검찰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들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의 정도를 넘어서서 매우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관께서만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하면서 옹호하고 계시죠.

○**법무부장관 황교안** 같은 논리, 같은 이야기들이 97년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새로이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호 의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헌법 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관적·객관적 자격요건, 능력에 따라서 제한이 가능하고 더군다나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의 자유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물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또 갈 수 있는 곳이고 가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청와대에 차출된 것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했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 대통령께서 ‘창조경제, 창조경제’ 하시니까 장관께서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아주 창조적인

퀘변을 늘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평가를 심하게 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헌법 교과서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기호 의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언론에서조차도 퀘변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옛그저께 대정부질문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당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사직 후에 청와대에 가는 것이 문제 안 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검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필요한 데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호 의원** 뭐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속기록을 들어 보이며)

속기록입니다, 옛그저께.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서기호 의원** 그러니까 결국 전문성이 있다, 그래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검사들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가는 것이 어떻게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형태로 기여한다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청와대의 특정 부서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그곳에서는 공직기강 등을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검사로서의 전문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기 때문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검사는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법률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법률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활용해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는 것입니다.

○**서기호 의원** 파견검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가

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냥 단순한 법률 검토만 하고 정부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청와대 비서실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통령을 통해서……

○**서기호 의원** 지금 정부의 변호인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의 변호인이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닙니다.

검사는 검사 본연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변호사로 출발한 것입니다.

○**서기호 의원** 그런데 정부의 변호사로 출발한 검사가 왜 대통령비서실에 갑니까?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에 가서 정부의 변호사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과 정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통령께서도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부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민정수석실에서 고위 공직자, 정치인, 공안사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을 통제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쳐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과거에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어서 이런 입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새 정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제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서기호 의원** 검찰은 정부의 각 부처, 청와대에 검찰 말고도 정부 각 부처에서 온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옵니다. 그런데 유독 검사만 청와대에 파견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그렇지요?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서기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사직하고 나서 곧바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가면 그것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마치 해당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장관 황교안** 궤변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자, 다음으로 또 이런 답변을 한번 하셨어요.

장관께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했을 뿐이고 청와대에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한 적이 없다’, 기억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약의 내용은 법무부나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한 것은 맞습니다. 청와대라는 명시적 언급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외부기관입니까, 검찰의 내부기관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공약에서 말하는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무부나 또 그런 다른 정부 부처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서기호 의원** 청와대는 검찰의 외부기관입니까, 내부기관입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제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니, 물론 청와대가 법무부는 아니지요. 법무부는 아닌데 공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첫 예가 법무부, 다른 부처, 다른 기관 그렇게……

○**서기호 의원**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외부기관입니까, 내부기관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는 대통령 산하기관입니다.

○**서기호 의원** 청와대를 물었습니다. 청와대는 외부기관입니까, 내부기관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기 때문에 내부기관, 외부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서기호 의원** 계속 제 질문에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청와대는 검찰의 외부기관입니까, 내부기관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게 의원님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외부기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법무부는……

○**서기호 의원** 그렇지요. 그거 당연히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왜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그 밑에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서기호 의원** 청와대는 외부기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했을 때 그 외부기관에 청와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약에서 말하는 ‘법무부, 다른 기관에’라고 할 때의 그 기관은 청와대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세요.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및’ 법무부 외에 별도로 외부기관을 따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외부기관에 청와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는 거기서 말하는……

○**서기호 의원**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 및’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를 예를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새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다른 기관에……

○**서기호 의원** 참 답변 어렵게 하십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것을 많이 줄였습니다.

○**서기호 의원** 그다음에 다음 화면 다시 보세요.

‘외부기관 파견 제한’ 다음에 뒷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자,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왜 그렇게 제한하겠다고냐?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

기에서 말하는 정치권 외압, 정치권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주 폭넓은 의미입니다.

○**서기호 의원** 폭넓은 의미요? 야당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권 외압의 핵심은 바로 청와대를 말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말한 외부기관은 바로 청와대를 말하는 것이고 청와대의 외압을 하지 않겠다, 차단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겠다……

자,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서 청와대 파견은 금지가 되는 겁니까. 왜? 법에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님, 감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를 규정한 검찰청법, 97년도에 개정된 것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개정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를 피해 가기 위해서 검사를 사직시키고 청와대에 근무시키고 다시 검찰에 신규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탈법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간접적인 법률 위반이고 탈법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청와대 파견검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도 없도록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나중에 복귀한 경우에도 그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유의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박근혜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청와대에 탈법 파견 후 검찰에 복귀한 검사가 몇 명이고 복귀 안 한 검사가 몇 명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사였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와서 다시 검사

임용 신청을 해 가지고 임용된 사람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복귀 안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11명 갔는데 5명 복귀했으니까 지금 6명이 복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그 6명은 아직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귀 안 한 거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청와대에 파견해서 근무를 종료한 뒤에 검찰에 복귀한 사람과 복귀 안 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떤 특정 기간을 잘라서 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복귀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장관님, 엇그저께 청와대에 임명된 사람이 바로 검찰에 복귀 못 하잖아요. 제가 질문했을 때는 당연히 청와대의 근무 종료 후 그 때로부터 바로 복귀한 사람과 복귀 안 한 사람을 물어보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부분 복귀하는데 복귀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 정확하게 6명 중에 5명이 복귀했고요, 1명만 복귀 안 했습니다. 그것도 대형 로펌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그런데 6명 중에서 5명이나 복귀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장관께서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대부분 복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직을 한 게 꿈수지요, 꿈수. 사직한 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직한 거고, 나중에 복귀할 걸 다 대비해서 파견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사표라고 하는 건 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장관님, 지금 계속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6명 중에 5명이나 복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하고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한 거 이거는 탈법행위입니다. 위법행위입니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감사라 하더라도 사표를, 지금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검사가 일단 사표를 내면 검사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임용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불법이다, 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기호 의원** 사직서만 냈을 뿐이지 검사 옷은 그대로 입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 가서도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서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병 출신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갑윤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용인 기흥이 아니고 수지 쪽, 용인시병 출신의 한선교 의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어린이들을 책임지고 맡아 줄 국공립유치원 확대 문제, 또 모든 체육계 비리의 근원인 체육특기자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잠시 법무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도 아니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걸 한번 여쭙 보려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 나가셨구나.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에 관한 것, 그냥 우리 일반 국민으로서, 법조인이 아닌 저 일반 국민으로서 느끼기에는 만약에 ‘법무부 및 외부기관’의 외부기관에 청와대가 들어간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검사의 청와대 및 외부기관’, ‘청와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그러면 청와대도 들어가고 외부기관에 법무부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맥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외부기관은 청와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러니까요. 청와대를 넣는다면 차라리 청와대를 명시하고 외부기관에 법무부 등을 넣겠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제 말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맞습니다.

○**한선교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지지요.

총리, 나와 주십시오.

요즘 학생들 가운데 3·1운동을 ‘삼점일 운동’이라고 부르는 학생들도 있고 ‘3일만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3·1절에 대해서 초등학생 중에 절반이 모르고 있습니다. 25% 정도의 초등학생이 유관순 열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교육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육의 문제뿐이 아니고 사회에서 배우는 국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교과서에는 우리의 3·1 운동을 “일본 통치하의 조선에서는 1919년 3월 1일 옛 국왕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서울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데모 행진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가행진의 사진을 넣었는데 그 안에는 여학생들과 기생의 모습을 한, 그래서 “여학생과 기생이 데모에 참여를 했다.” 해서 대단히 폄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겠고요.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사실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3·1 운동은 세계가 인정하는 비폭력운동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래 갖고 세계 전역의 식민지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폭력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니까 교학사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금성출판사는 “폭력적인 양상을 보였다.”, 두산동아는 “폭력투쟁으로 바뀌었다.”, 리베르스쿨은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렇게 우리 교과서가……

지금 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한 태극기를 갖고 만세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그저 세 군데가 될까 말까 이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 속에 사실에 기초해서 역사라는 게 기술이 돼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후학들한테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

러한 측면에서 올바르게 균형 잡힌 역사인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깊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어떠한 경위에서 그렇게 됐는가 알아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우리 교육부하고 많이 의논을 하셔서 갖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조차 잘못된 기술을 한다면 이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점을 좀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정고등학교 나오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선교 의원** 손기정 선생님이 양정 나오셨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선배이신데, 베를린 올림픽 기록에는 손기정 선생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일본으로 돼 있지 않나요?

○**국무총리 이완구** 일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으로 되었지요. 그래서 그 후에 국적을 변경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한선교 의원** 저는 노력만 있었지 변경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저는 ‘이것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역사가 아닌가?’ 그랬더니 먼저 어느 체육단체 회장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안현수가 딴 금메달을, 안현수를 대한민국으로 고칠 수 있느냐?’ 그걸 틀린 것이지요. 우리는 강제 합방이 됐던 것이고 안현수는 자기가 귀화를 한 것이고. 이 점도 역사 바로 세우기, 또 한일관계의 미묘한 역사관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자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동의합니다.

○**한선교 의원** 지금 방청석에 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유아교사 임용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두 줄 정도 와 계신데,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는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입니다. 제가 2008년도인가요, 교육위원회에…… 우리 황우여 부총리께서 그때 교육위원회에 계셨었나 이랬는데, 하여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라고 해 갖고 병설유치원 확대에 관한 법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위에

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18대가 끝남으로써 없어졌습니다.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은 단설과 달리, 단설은 한 건물에 여러 유치원 방이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유치원이지요. 병설은 학교의 남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 학급 혹은 두 학급…… 나는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유는 2008년 초였나요, 2월 달인가 어느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떨어졌어요’, 보니까 병설유치원 추첨 날이에요. 그건 거의 로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모가 병설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한 달에 아이에게 쓰는 돈은 교육과정 그리고 방과후까지 해도 8314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19만 5079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지요.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 엄마는 이제부터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합쳐지면 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게 오늘의 저출산의 문제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질적인 교육 향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신데 같이 공동 발의한 어떤 국회의원분은 중간에 저한테 좀 빼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빼 드렸습니다. 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압력이 들어와서 도저히 못 하겠다……

지금 내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취지를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선교 의원**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썄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취학 수요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학부모들 입장을 고려해서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교 의원**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전국적으로 10.6%이고요, 사립유치원은 36.3%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입학해야 될, 입원해야 될 전체

아이들의 46.9%만 유치원을 들어가고 있고, 46.9% 중에서 10% 정도가 국공립, 나머지 36.3%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특히나 유치원 수는, 또 그것은 취원율과도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서울과 같은 수도권은 더 적고…… 서울, 부산이 제일 적습니다. 농촌으로 갈수록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과거에 있던 학교의 교실이 남고 그러니까 거기에 병설유치원이라든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도심의 젊은 엄마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나머지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학급 증설, 병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리고 저기 유아교사를 꿈꾸고 있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인데 저 사람들이……

유아교육학과가 1년에 한 1만 5000명 정도 배출이 됩니다. 과거에는 더 많았는데 2008년에는 줄어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1년에 뽑는 임용 정원은 뭐냐 하면 사백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한 학교에 하나씩 교실…… 요즘 도심에서도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실이 좀 남습니다. 여기에 한 군데만, 한 학급씩만 만들어도 저 젊은이들은 안정된 직업, 또 보람 있는 유아교사로서의 삶을 안정되게 보낼 수 있습니다. 4000여 명의 직업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고용부장관님 여기 계시지만 방학 때마다 인턴사원, 청년 일자리 창출,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결국 개강하면 다시 돌아갈 건데.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단설로 국공립을 만들려면 한 학급당 한 12억 정도 들고요, 그냥 지금 있는 현재 학교에서 교실 하나를 가지고 만든다면 한 6000여만 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그냥 먼저, 18대 때 교육위원회에 계셨잖아요? 위원장도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선교 의원 취지는 충분히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우리……

○한선교 의원 제일 난관은 뭘니까,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재정이지요. 재정이 있고, 존경하는 한선교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사립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국공립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나라 연혁적으로 이미 사립유치원이 다 있기 때문에 국공립유치원을 만들면 또 그만큼 사립유치원이 줄어드는, 폐쇄에 이르기까지 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또 국가재정이 부족하니까 농어촌이나 사립유치원이 형성되지 않은 곳을 찾아서 국공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도시권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을 좀 더 확장해서 균형을 맞춰야겠다 하는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기본계획만 갖고 계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마인드만 있으시면 안 되고……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어떤 엄마는, 안양에 사는 어떤 젊은 엄마는요 아이 둘이 있는데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나가서 벌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둘을 자기가 집에서 데리고 아침부터 두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런데 국공립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를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아직도 그렇게 지원을 못 하고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편차가 있는 것이지요. 국공립 다니는 어린이한테는 많은 국가재정을 지원하게 되고 사립유치원 다니는 어린이에게는 적은 것을 지급하는 이 모순을 어느 정도 줄이려고 지난번에 한 30만원 정도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학부모들께서 국공립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천 원만 내면 되는데 사립유

치원을 가게 되면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렇게 내는 차이 때문에 그것이 교육부장관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국공립과 사립 간의 차이를 줄여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초등학교 교실이 많이 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 지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립이 여의치 않은 데거나 신도시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아주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어린이집 확대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CCTV 활용방안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법안이 통과되면 뭐 하겠습니까, 물론 하게 되면 예산까지 한꺼번에 통과되겠지만.

그 CCTV 설치를 해서 아이들을 감시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교사를, 이것보다는 우리나라에 1인 방송을 하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국무총리 이완구 1인……

○한선교 의원 예, 모두가 내가, 제가 방송을 매일 라이브로 할 수 있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선교 의원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 PC만 있으면 거기에 카메라, 아주 초보적인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늘 라이브로 엄마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집에서 PC로 볼 수 있고 모바일로 볼 수 있고.

지금 저기 나오는데요. 한번 저기 좀 봐 보실래요,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해서 갖고…… 알겠어요.

비용도 이 1인 TV 쪽에서는 자기들이 들게 없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완구 이게 지금 웹 카메라하고 똑같은 겁니까?

○한선교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한선교 의원 그래서 이것은 감시가 아니고 소통의 차원입니다.

우리 김희정 장관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이 CCTV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후적 개념에서 나중에 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웹 카메라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싸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또 본인의 동의가 전제가 된다면 웹 카메라의 설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선교 의원 그러니까 CCTV는 그냥 일방적으로 감시를 하는 거고요. 이 웹 카메라 같은 경우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설사를 했어요.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시 반에는 부모와 아이들 간의 소통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카메라 앞에 와서 밝은 모습을 보여 주는, 이런 여러 가지 감시가 아닌 소통의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육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전제가 돼야……

○한선교 의원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표현이 죄송하지만 국가예산 타령을 늘 하게 되니까 저는 이것이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총리 전에는 이 웹 카메라 제도가 어떻겠느냐라고 강력히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문체부장관님!

교육부총리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늘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체육계 비리는 ‘스포츠 4대 악’이 아닙니다. 조직의 독점이고, 성추행이고, 심판 비리이고…… 그 모든 것이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때문에 생긴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교육부총리께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같이 들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좀 고쳐 나가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한선교 의원** 4대 약 비리 근절한다고 사람들 사법권 갖고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래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된 문제는 사실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 저희 문체부에서도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한다든지 또 수능, 내신성적 같은 그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같이 반영하는 것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장 사항이라서 교육부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고요.

교육부총리님!

총리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체육특기자를 뽑는데 전부 1 대 1, 정원 이상 뽑지를…… 그러니까 테스트라도 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한선교 의원** 축구부 정원이 23명인데 68명인 학교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끼워 넣기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사전에 미리 선정을 다 해 놓고 하는 예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리고 너무 많이 뽑잖아요. 23명이 축구부인데 68명이 있어요. 그중에 16%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입학하자마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학입시 때는 일단 지침을, 교육부의 지침으로서는 그러한 것은 다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그러한 실정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우여** 이번 입시에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교 의원**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체부장관님, 죄송합니다. 한번만 잠깐……

저는 장관님께서 대학로 소극장의 화재 등 안전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지 않습

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 지역 방문해서 다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래서 작년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좀 삭감돼 갖고 한 10억 정도 현재는 올라가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10억 갖고요, 대학로 그렇게 꼭 밀집돼 있는 그 소규모에서 한 군데 만일 화재가 났다, 대형사고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10억 갖고 뭘 하겠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그 예산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한선교 의원** 말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정말 심각해요. 어디서 하나 불나야지 정신 차리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꼭 좀 해 주시고요.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민생활체육……

○**한선교 의원** 국민생활체육, 이 통합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합해 놓고 KOC를 분리하는 문제는, 이걸 이번에 우리 상임위 통과된 안에도 없지요?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한선교 의원** 현재가 아니고,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건 체육회에서 체육회의 의견으로다가 판단되고 결정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의원** 옳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교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지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유아교육 전공한 분들이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아교육을 전공하면 도대체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됩니까? 유아교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정

원을 늘려 주고 학생들은 입학하고 나온 뒤에는 갈 데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취업 현실이 아닐까.

제발 앞에서 보여 주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저와 같은 정말 전공한 학생들이 앞으로 안 정된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보람을 가질 수 있게 이 나라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한선교 의원님.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배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배재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입니다.

늦은 시각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박근혜정부에게 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입니다. 입법부 현직 국회의원을 청와대 대통령 산하 정무특보로 임명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께서 많이들 답답해하십니다.

심사숙고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께 문화 융성을 약속했습니다.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정확히 2년 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난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요새 문체부가 ‘문화체육인맥부’라고 불리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언론에서 그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문화예술계는 장관이 그리고 체육계는 김종 제2차관이 사이 좋게 자리 챙겨 먹기 하고 있다는 비판, 억울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재정 의원** 오해인지 좀 알아보지요.

장관께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에 발탁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올랐을까?’

장관, 혹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닙니다.

○**배재정 의원** 그러면 누가 장관을 대통령께 추천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건 제가 알 수도 없고, 실제 제가 장관이 된 일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이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재정 의원** 박근혜정부 청와대 초기 홍보를 담당했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백기승 전 국정홍보비서관,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잘 알지는 못하는데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윤 전 대변인은 경동고 1년 선배시고요 그리고 백기승 전 비서관은 동기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의원** 아주 각별한 사이시더라고요.

백 전 비서관은 대우그룹 홍보맨 출신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홍보를 담당했고요, 그 유명한 마포팀도 운영하셨지요.

백 전 비서관이 대우를 나온 뒤에 4년 동안 커뮤니케이션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의원** 자, 생각을 좀 해 보지요.

미래 권력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친구가 장관에 발탁될 정도의 홍보전문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지사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일반적으로 홍보 회사의 자문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다가 백기승 씨가 하던 회사와 관련해 갖고 제가 그쪽 업무를 해 보거나 혹은

자문을 직접적으로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배재정 의원 요즘 관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할 때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아주 바짝 긴장한 모습인데 유독 장관께서는 편안하게 대통령을 대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릇된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종 차관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정윤희 씨를 배경으로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 김 차관이 실세다’ 이 얘기는 유진룡 전 장관 때부터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던 이야기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배재정 의원 실제로 김 차관 힘 막강합니다. 인사 개입 대단합니다. ‘한양대 라인’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한 가지 장면 더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1월 8일 대통령이 소치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하기 위해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큰 행사에 장관이 가시면 보통 차관은 가지 않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어떤 행사인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함께 참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회의에서도 실제 같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배재정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와대에서 ‘김종 차관도 꼭 참석시켜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유진룡 장관이 김 차관을 누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청와대가 취한 경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진룡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급작스럽게 경질됐습니다.

지금은 문체부 주변에 어떤 평가가 나도느냐면요, ‘김 장관님도 실세시다. 두 장관님께서 정책은 무너뜨리고 비전은 득세시키고 있다’.

장관, ‘팔목홍대’라는 말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언론에 나온 것 봤습니다.

○배재정 의원 장관 취임 이후 문체부 산하기관장과 각종 위원회에 홍익대 출신 인사가 부쩍 늘

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산하기관장이 9명이 임명됐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다 홍대 학부를 나온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그 기간 동안에 임명된 산하기관장 중에 서울대는 4명이나 됩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홍대 사람들만 다 뽑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오해십니다.

○배재정 의원 그건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재정 의원 지난해 8월 19일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는 2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지요? 한 분은 이영춘 씨, 가수 설운도 씨고요.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연예인 특보단장을 맡았습니다. 지극히 전형적인 보은인사지요.

또 다른 한 사람, CF 감독이자 뮤직비디오 감독인 차은택 씨입니다.

장관, 차 감독 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사실상 제자인 셈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대학원 제자입니다.

○배재정 의원 그런데 차 감독의 급부상, 아주 놀랍습니다. 차 감독이 문화융성위원이 되고 한 주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차 감독이 연출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대통령과 차 감독,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고, 차 감독이 문화융성위원이 된 건 제가 장관이 되기 이전의 일이라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배재정 의원 예, 하루 전인 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이 차 감독과 함께 예전부터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배재정 의원 차 감독, 아주 승승장구하십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영상감독,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만찬 연출,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관, 올해 5월 이탈리아에서 밀라노 엑스포 열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배재정 의원 거기 한국관 전시영상감독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차은택 감독입니다.

○배재정 의원 그렇지요? 최근 장관 지시에 따라 운영위 체제로 개편한 부산국제광고제 운영위원회에도 차 감독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배재정 의원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홍보·광고 그리고 영상 망라한 전문가 차은택 감독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런 식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다 문화예술계에서 여러 가지 걸작을 맡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차은택 감독만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다가 이 정부 들어서서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차은택 감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배재정 의원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또 있습니다.

차 감독과 함께 부산국제광고제 새 운영위원이 된 이동수 씨입니다. 이분도 광고인이시고요. 평소 차 감독과 술자리도 곧잘 가지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장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알고는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이분이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원래는 뉴욕 문화원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모 통신사 경영기획실 전무로 가게 됐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내용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뉴욕 문화원장에 애초 문체부 용 아무개 씨가 내정돼서 뉴욕으로 짐도 다 부치고 송별회까지 했는데 갑작스럽게 발령이 취소됐습니다. 그 뒤 다른 사람이 그 자리 면접을 봤지만 업무역량이 떨어져서 지금은 공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억울한 게 정말 많으시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의원 장관과 차관이 각종 자리 내 사람 심기로 국정을 농단하는 사이에 당연히 문화정책 망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를 우선 들겠습니다.

장관, ‘늘품체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예, 압니다.

○배재정 의원 지난해 11월 말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대통령께서 시연까지 하셨습니다.

늘품체조,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원래 국민건강체조라는 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재미가 없고 대중화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늘품체조를 개발한 분이 자기네 체조도 한번 봐 달라고 그래서 체육진흥과장이 한번 만나 본 결과 재미있고 굉장히 보급하는 데 훨씬, 국민들한테 보급하는 데 유리하겠다 제안을 해서 담당 국장하고 차관이 만나 갖고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서 평가한 결과 늘품체조가 기존의 국민건강체조에 비해서 재미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 훨씬 좋은 그런 체조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문화의 날 행사에서 쓰게 된 겁니다.

○배재정 의원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하십니다.

국민건강체조를 우리 체육전문가 그리고 이 전문가분들이, 스포츠개발원에서 열한 분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체조입니다.

그런데 늘품체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제가 보고받기로는 실제 정아름이라는 체조 관련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배재정 의원 제가 문화부 자료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간으로부터 기증받은 늘품체조에 대한 개발 기간 및 예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문화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체조에 대해서 모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그게 얼마가 들었는지 또 얼마 동안이나 개발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체조가 갖고 있는 효과와 기능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또 선택한

○**배재정 의원** 그러면 늘품체조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담당 국장과 과장과 차관께서……

○**배재정 의원** 전문가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전문가들이시지요.

○**배재정 의원** 그냥 보시면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맡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자, 정 아무개라는 분이 체육진흥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 한 차례의 면담과 시연 후에 코리아체조가 갑자기 늘품체조로 바뀌어서 대통령이 시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절차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일반 안무가들이 만든 체조, 우리 문체부 국·과장께서 보시고 ‘아, 이 체조 괜찮겠다’ 하면 1년 동안 개발한 체조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충분히 훌륭하다면,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륭하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부에 의해서 무조건 우리가 돈을 들여 갖고 개발했으니까 이것만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요.

지금 존경하는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조금 그렇지 않은 것이, 저희가 이 체조 시연과 또 평가를 위해 갖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한 번 딱 보고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오해시고요. 체육진흥과장을 통해 갖고 여러 차례 이것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그렇게 대단한 늘품체조, 지금 잘 보급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보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조 중에서 국민건강체조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스트레칭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재미가 없어서 늘품체조가 갖고 있는 재미있는 요소하고 같이 한번 섞어 볼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그렇게 훌륭한 체조라고 해서 급

작스럽게 코리아체조를 대체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시연도 안 되고 있나 보지요? 대통령께서는 본인께서 시연도 하셨으니 국민들에게 잘 보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재정 의원** 솔직하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자로 인해서 스포츠개발원에 다시 수정 의뢰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체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잘 섞어서 좋은 체조로다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의원** 이 늘품체조 개발자, 국내 아이돌 그룹의 안무가입니다. 이 그룹은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차은택 감독과 또 깊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차 감독이 여러 번 뮤직비디오도 찍어줬지요.

저는 그래서 이 같은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차은택 감독의 깊은 인연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걸 통해 갖고, 차 감독이라든지 개발한 정아름 씨가 이걸 통해 갖고 어떤 이익을 취했다거나 이걸 통해 갖고 어떤 이득을 봤다면 잘, 그렇다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한 번도 그걸 통해 갖고 이익을 취하거나 이득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봉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재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대한민국의 행정입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기회가 다 열려있다고 지금 장관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는 최소한 문체부 내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행정부서를 통해 갖고, 과장이라든지 그 담당하고 있는 행정사무원들을 통해 갖고 언제든지 열려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의원** 상임위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늘품체조에 하자가 발견되자 장관은 해당 과장을 한

달 뒤 다른 부서로 발령 내고 이를 덮고 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사건이자 능멸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진상을 파악해보시길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장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배재정 의원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총리, ‘지방’과 ‘지역’의 차이 아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무총리 이완구 지방이라는 말이나 지역이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법률적 용어로는 지방이라는 말을 쓰고요. 중앙에 반대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고요. 지역은 좀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쓰는데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구별해서 쓰기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재정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이라는 말 속에는 ‘중앙’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중앙’은 중심이고 우월하고 ‘지방’은 변방이고 열등하다는 편견과 차별이 섞여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글쎄, 저희 나라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적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대로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역사와 전통을 달리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굳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지방이라는 말이 중앙에 비해서 열등적 요소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배재정 의원 사실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서울 아니면 다 시골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다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배재정 의원 그래서 저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지역’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정치적·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역자치를 상징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 명칭부터 ‘지방’을 ‘지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동참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이라는 용어는 우리 헌법과

법령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헌법과 법령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국회에서 좋은, 활발한 논의를 전제로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재정 의원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쭙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살 만합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저도 지자체장을 한 입장에서 대단히, 현재 일반적으로 광역이 되었던 기초가 되었던 지자체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편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조세체계의 문제에 기인하기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입의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라든가 지방소득세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좀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해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의원 표를 좀 보여 드리겠는데요.

지역의 재정자립도,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배재정 의원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올해는 지난해 대비 무려 1조 4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어려운데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총리, 지난 2월 23일에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제도 개선과 교육재정 개혁을 올해의 개혁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은 아시다시피 내국세 20.24%로 충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의 규모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책임성 있게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이 문제가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의원** 그런 신중한 접근,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발언을 보시면, 지금 화면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역이 중앙정부가 주는 돈만 믿고 세수 확보를 게을리 해서 재정이 어려워졌다, 그러니 정부가 주는 돈을 줄이겠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셔서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고 계시고요.

교육재정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역교육청이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빚더미에 앉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지자체장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방만한 경영을 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연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10조 정도의 전출금을 지방교육재정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항상 지방교육재정 쪽에 강조를 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좀 책임성 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 달라 하는 그런 주문과 함께 저희가 전출금을 주곤 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그러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잘 조화롭게 해서 하고 무작정 내국세와, 아까 말씀올린 20.24%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전 이해를 합니다.

○**배재정 의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역살림이 어려워졌습니까?

MB 정부가 시작한 부자 감세, 우리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인 지방세인 취득세 영구 인하해 줬습니다. 법인세 역시 MB 정부 이후 계속 깎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증세 없는 복지 역시 사실은 지역재정 공간 털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색은 대통령과 정부가 내고 사실은 비용은 지역으로 다 떠넘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3년 차, 3년째 세수가 줄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세수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이나 중앙이나 다 함께 재정을 좀 아껴 써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의원** 총리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역 정부 그리고 지역 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까지 같이 결합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간곡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배재정 의원** 탄탄한 재정은 사실 지역 주권의 기본적인 토대인데 정부가 그 토대를 제대로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무너뜨려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총리님, 지역 차별 문제가 언론 분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언론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역언론이 무너지면 지역의 여론 다양성 그리고 지역문화도 무너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화면 잠깐 보시지요.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배재정 의원** 지역언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지역언론 살리기 정책은 전무합니다.

지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대충 한 100억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올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26억 남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배재정 의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2016년 이면 종료됩니다. 제가 문체부와 기재부에 수년째 기금 확보를 요청했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광고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광고만이라도 균등 배분해서 지역언론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공청회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언론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정부광고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정부광고 예산의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 이

런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서 지역언론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군 단위의 지역신문에 대한 상임고문직을 한 십여 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언론 활성화와 함께 정부광고의 예산 효과에 대해서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재정 의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감사합니다.

○**배재정 의원** 문화는 애초부터 진보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성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온통 파괴에 집중돼 있습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러하니 부산국제영화제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진정 문화융성 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문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부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 대한 철학부터 정립하십시오.

지역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대통령의 지역에 대한 인식 한참 잘못돼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방향 돌려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지역이 살아나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지역과 더 이상 힘겨루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배재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사회·문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과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표현에 '우리나라', '저희 나라', '이 나라'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 국립국어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올바른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낮춘 말이 '저희'고 '저희'를 써

서 '저희 나라'와 같이 표현하지는 않는다 하는 답변이 왔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나 민족은 남의 나라, 다른 민족 앞에서 낮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나라'에 대해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보다는 다소 '나라'와 '민족'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질문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 의원(264인)**

강기운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김광림	김기식	김기준	김동완	
박주선	박지원	박창식	박혜자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세연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김승남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김우남	김운덕	김을동	김재경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김종태	김춘진	김태환	김학용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김한표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나성린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철수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대동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인숙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박지원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백재현	부좌현	서상기	손인춘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명수	염동열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의동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윤관석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병석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자스민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원욱	이윤석	이정현	이종배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성	이헌승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현재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전순욱	전정희	정갑윤	정미경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전병헌	전순욱	전정희	전하진	정진후	조명철	조원진	진영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하태경	한명숙	한정애	함진규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홍문종	홍의락	홍의표	홍일표	
정호준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홍지만	홍철호	황우여	황주홍	
조해진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속개 시 재석 의원(71인)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경대수	김관영	김도읍	김명연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김민기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김용남	김우남	김을동	김재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김정훈	김제식	김춘진	김태년	
홍영표	홍의락	홍의표	홍일표	김태원	김한표	김현	김희정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노웅래	류성걸	류지영	민병주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개 의 시 재석 의원(144인)				박윤옥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강기윤	강길부	강석훈	강은희	부좌현	서상기	송영근	안규백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길정우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영식	

원 유 철	유 대 운	유 승 민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개 호	이 상 일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우 현
이 원 옥	이 이 재	이 종 배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철 우	이 현 승	임 내 현
임 수 경	전 순 옥	정 갑 윤	조 명 철
조 해 진	최 민 희	최 봉 홍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우 여	

○산회 시 재석 의원(64인)

강 은 희	권 은 희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재 원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춘 진	김 태 흙	김 한 표	김 현
김 희 정	민 현 주	민 홍 철	박 대 동
박 완 주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지 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재 현	서 영 교
송 영 근	심 재 권	안 규 백	양 창 영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윤 근
유 승 민	윤 명 희	윤 재 옥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원 옥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자 스 민
이 재 영	이 종 결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한 성	임 수 경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최 민 희	최 재 성
한 선 교	홍 철 호	황 우 여	황 인 자

○청가 의원(15인)

강 동 원	김 상 훈	김 희 국	박 대 출
송 광 호	안 민 석	유 일 호	은 수 미
이 만 우	이 목 희	장 윤 석	장 하 나
정 문 현	주 영 순	한 기 호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형 준
입 법 차 장	구 기 성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완 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 우 여
법 무 부 장 관	황 교 안
행정자치부장관	정 중 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 종 덕
보건복지부장관	문 형 표
환경부장관	윤 성 규
고용노동부장관	이 기 권
여성가족부장관	김 희 정
국민안전처장관	박 인 용

○출석 정부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정 재 곤
방송통신위원장	최 성 준

【보고사항】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별	문재인	김성곤	새정치 민주연합	2015. 2. 26
	김종훈	.	새누리당	
동북아역사 왜곡대책특별	주승용	.	새정치 민주연합	
	유일호	김희선	새누리당	
대법관(박상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의안 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5. 2. 26 신의진·안홍준·강은희·이노근·신경림·윤명희·김명연·김태원·류지영·김한표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2015. 2. 26 신의진·안홍준·강은희·이노근·윤명희·김명연·류지영·김한표·서용교·문대성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5. 2. 26 김기준·김현미·이개호·한명숙·이학영·민병두·전순옥·이원옥·박민수·박영선·송호창 의원 발의)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5. 2. 26 이한성·류지영·김성찬·안홍준·염동열·김성곤·송영근·김태원·홍철호·경대수 의원 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2015. 2. 26 이한성·류지영·박영선·김한표·정희수·이상일·조명철·경대수·안홍준·이자스민 의원 발의)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5. 2. 26 김기준·김현미·이개호·한명숙·이학영·이해찬·민병두·전순옥·이원옥·박민수·박영선·송호창 의원 발의)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2015. 2. 26 황인자·손인춘·정성호·김장실·이한성·홍철호·조명철·황주홍·김태원·권은희·김정록 의원 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용구) 인사청문 요청안

(2015. 2. 26 대법원장 제출)

2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2015. 2. 27 의장 제의)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3일간)

○**보고서 제출**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제출되었음

2015. 2. 26 행정자치부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부록으로 보존함)